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성 평가(2023~2024) -

강원특별자치도

차례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제1절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	2
1. 추진 배경 및 법적 기반	2
2. 비전 및 전략 체계	2
3. 연도별 주요 추진 실적	2
4. 평가체계 및 환류 시스템	3
5.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	3
제2절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2023~2042)	5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5
2. 계획 수립의 과정	5
3.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6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성 평가 개요	9
1.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성 평가 배경 및 목적	9
2.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	9
3.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 및 기준	12
제2절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별 평가 결과	14
1. '목표 1. 빈곤감소 및 포용적 복지강화'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14
2. '목표 2.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17
3.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21
4. '목표 4. 양질의 교육 증진'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26
5. '목표 5. 성평등 보장'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29
6.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33
7. '목표 7.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산업 육성'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37

8. '목표 8.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성장 촉진'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40
9. '목표 9. 지역산업 성장과 혁신'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45
10. '목표 10. 불평등 해소'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48
11.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51
12.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54
13. '목표 13. 탄력적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56
14. '목표 14. 해양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61
15. '목표 15. 육상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64
16. '목표 16. 인권·정의·평화'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67
17. '목표 17. 협력'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70
제3절 요약 및 총평	73

제3장 강원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제1절 심층평가의 개요	75
1. 국가 지속가능성 심층평가	75
2. 강원도 지속가능성 심층평가 목적 및 필요성	75
3. 강원도 지속가능성 심층평가 지표 선정 원칙	76
제2절 주요 지표별 심층평가	78
1. (중요 지표) 목표 9.1.1. 주력산업 분야 지원기업의 사업화 매출액	78
2. (중요 지표) 목표 11.1.2 철도 연장	82
3. (시급 지표) 목표 7.1.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및 에너지 자급률	85
4. (시급 지표) 목표 1.1.1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	89
5. (부진 지표) 목표 3.1.1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92
6. (부진 지표) 목표 10.1.1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율	95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제1절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

1. 추진 배경 및 법적 기반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3월 도의회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제1기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제도 운영이 시작됨

2. 비전 및 전략 체계

- 강원도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7개 목표, 39개 세부목표, 95개 이행지표를 설정함
- 강원도 지속가능발전전략은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한 경제자립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사회 구현
 - 청정환경 보전 및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 상생협력 인식 강화
- 위 체계는 기본전략(20년 단위)과 추진계획(5년 단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전략은 2042년을 목표로, 추진계획은 2027년을 목표로 하여 도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3. 연도별 주요 추진 실적

2023년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 공무원 대상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 2회 실시(3월, 7월)
- 제1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및 운영 개시(5월)
- 이행지표 관리 및 평가방안 마련 착수
- 관련 교육·홍보사업 추진 및 콘텐츠 제작

2024년

- 지속가능성 평가계획 수립: 평가대상, 항목, 시기 등 명문화
- 2023~2024년 지표 이행실적 중간 점검 실시
-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 및 SDGs 홍보영상 제작·배포
- 민관 협력 기반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개최 (11월)

2025년

- 지속가능성 평가 및 도정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공표 예정
- 지표별 이행실적 점검 및 지표개선안 마련(폐지, 변경 등)
- 도정 주요정책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체계 본격 운영
- 지속가능발전주간 운영, 도민 홍보캠페인 및 교육 워크숍 실시 예정

4. 평가체계 및 환류 시스템

- 강원도는 2년 단위로 도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며, 지표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장기 목표 달성 전망을 도출함
- 또한 행정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이 과정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포럼 등 공개형 논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함

5.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

- 강원도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두 개의 조직을 운영 중에 있음

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설치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 조례 제12조
- 위원 구성: 19명(당연직 6, 위촉직 13), 공동위원장(행정부지사, 민간위원)
- 주요 기능: 정책 심의·자문, 지속가능성 평가, 교육·홍보 등
- 임기: 2년, 2회 연임 가능

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설치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 협의회 조례 제4조
- 위원 구성: 19명(당연직 1, 위촉직 18), 위원장(민간위원)
- 주요 기능: 민간 이행력 확보, 도민 참여 확대, 교육·홍보 실행
-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6. 향후 추진 방향

-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임
- 도정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정착 및 주기적 이행
- 지표 체계의 유효성 검토 및 지속적 개선
- 민관 협력 기반 확대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홍보 프로그램 확대
-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지속가능성 검토체계 고도화

-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임

제2절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2023~2042)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및 추진계획(5년) 수립과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의 여건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2023~2042년(20년)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 2023~2027(5년)
- 세계가 직면한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수인 상황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계획을 수립
-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반현황 및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행관리 확보방안을 제시

2. 계획 수립의 과정

- 연구용역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비전·전략·목표 및 세부목표(안) 선정
 - 국내외 현황 및 도의 경제·사회·환경부문의 지역적 특성 및 현황분석을 통해 기본전략 및 목표 수립
 - 추진 전략별 세부 목표 선정 및 지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이행과제의 추진상황 분석
- 부서 의견조회 및 지표 조정 지속 협의
 - 지표에 대한 연계성 분석 및 지표 변경(안) 마련
 - 지표별 해당 관리부서와 협의(면담 등)를 통해 지표의 대표성과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 수립 및 논의 후 최종 지표 확정
- 관련 분야 전문가·관계자 의견 수립 및 계획 보완
 - 분야별 전문가와 대면회의를 통해 비전, 목표, 세부지표 등 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 3회 실시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완사항 및 사업추진방향 수시 협의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지표 추가 등 계획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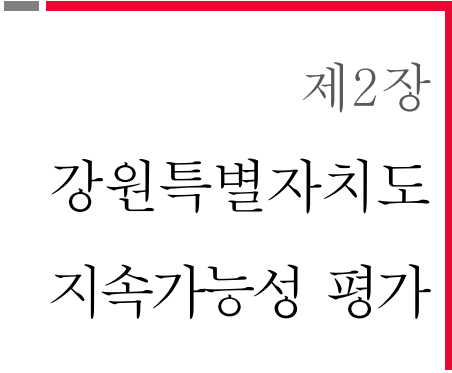
3.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극복 등 강원도가 앞으로 중요시해야 할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담은 비전을 설정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비전으로 4개의 전략과 17개 목표, 39개 세부 목표로 구성
 - 4대 전략 : SWOT 분석, 핵심전략 도출 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자립”, 사회목자보건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사회 구현”,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청정환경 보전과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인권·정의·평화협력 등을 위한 “상생협력 인식 강화” 전략 수립
 - 목표 : UN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성을 고려하고 도의 추진과제들을 담아 17개의 목표로 수립
 - 세부 목표 : 17개 목표와 연계하여 행정 각 분야의 업무에 반영·실행할 수 있는 39개 세부 사항들로 구성



[표 I -1]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목표 정의

목표	강원 SDGs	정의
1	빈곤감소 및 포용적 복지 강화	빈곤 감소 및 포용적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보장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2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농가의 소득증대 및 농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건강 보장
4	양질의 교육 증진	모든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교육, 기술교육, 직업교육 등 양질의 교육을 보장
5	성평등 보장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각종 제도나 정책을 개선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관리와 효율적 물 공급
7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증대하고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과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저탄소 신산업 육성
8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마련
9	지역산업 성장과 혁신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성장 환경 조성
10	불평등 해소	나이, 성별, 장애 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적으로 평등한 환경을 제공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SOC 확충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소비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
13	탄력적 기후위기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능력을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14	해양생태환경 보전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효율적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
15	육상생태환경 보전	육상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복원·이용·관리 활동 활성화
16	인권·정의·평화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실현과 상생과 공영을 위한 협력 증진
17	협력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도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성 평가 개요

1.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성 평가 배경 및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및 추진계획(5년) 수립과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의 여건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2024년 기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

2.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

- 본 평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서 정의한 4대 전략, 17대 목표, 39대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5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시행함
- 지속가능 점검지표는 세부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안을 만들고 강원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평가 대상인 점검지표는 대표성 및 지속가능성, 자체평가가 가능한 데이터 구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최종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2023~2024)



[그림 4]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

목표	세부목표	지표
목표 1. 빈곤감소 및 포용적 복지 강화	1.1. 취약계층 복지정책 강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 / 장애인연금 수급률 / 기초 연금 수급률 /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전년대비 사례관리 아동비율
목표 2.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2.1. 농가소득원 확대 및 생계안전망 강화	농외소득(1가구당 농가소득) / 농업인 수당 지급률 및 경영체화율 / 농업정책보험 가입실적 상향 비율 / 병해 충 방제 및 예찰실적 점수 / 농촌마을 개발지원 개소수
	2.2. 식량안보 및 친환경 농업육성	벼 재배면적 감축 달성률 /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
	2.3.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농업 실천농가 수 / 품목제조 보고 증가율 / 농 수산물 수출증가액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3.1. 건강한 삶 보장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 암검진 수검률 / 흡연율 / 치 매환자 등록 관리율
	3.2.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공공병원 병상 수 / 의료취약지 의료시설 이용자 연인 원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 보건기관 시설개 선 및 장비 보강지원 개소
	3.3. 스마트 의료서비스 실현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목표 4. 양질의 교육 증진	4.1.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 보육비용 지원 받는 아동 비 율 / 등록금 장학금 수혜율
	4.2.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학습 장애인 참여자 수 / 평생교육 운영지원 건수
목표 5. 성평등 보장	5.1. 성평등 문화 확산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 /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 / 양성평등기금 운용 규모
	5.2. 여성의 사회참여	위원회 여성 비율 / 여성관리자 임용비율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6.1.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보급률 / 하수도 보급률 / 하천수질 BOD Ia 등급 달성률 / 상수도시설 안전 점검률
	6.2. 효율적 물 공급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률 / 유수율
목표 7.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산업 육성	7.1.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소비 확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및 에너지 자급률 / 연차별 보급대수
	7.2. 친환경 에너지 저탄소 신산업 육성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및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추 진 성과 /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유치 기업 수
목표 8.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성장 촉진	8.1.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15세 이상 취업률
	8.2.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여성 15~64세 고용률 /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인원 /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 장애인 고용률
	8.3. 폐광·접경지역 활성화	폐광지역 활성화 지원 기금 조성 증가율 / 접경지역 소 상공인 시설환경개선 만족도 평가점수
	8.4.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대비 지원실적 / 소상공인 매출 전년대비 / 사회적경제기업 신규진입 수




목표	세부목표	지표
목표 9. 지역산업 성장과 혁신	9.1. 지역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	주력산업 분야 지원기업의 사업화 매출액 / 바이오헬스 산업 종사자 수 / 미래 주도형 축산업시설 지원율 / 농식품 산업 업체 성장률
	9.2. 산업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
목표 10. 불평등 해소	10.1. 모든 사람에 대한 포용성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 저상버스 보급률 / 저소득층 자활근로 참여자 수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1.1. 도내 지역 간 교통망 구축	도로포장률 / 철도 연장
	11.2. 주거 불안 해소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급여 지원율
	11.3.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도민 안전 집중안전점검 추진 성과평가 결과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2.1. 녹색소비 촉진	녹색제품 구매율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목표 13. 탄력적 기후위기 대응	13.1. 기후변화 대비 재난·재해 방재기반 강화	산불방지 성과달성도 / 사방사업 실행률 / 자연재해 취약지 예방사업 예산 / 온열·한랭 질환자 수
	13.2.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 / 탄소포인트 참여가구 수 증가율 /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종합 점수 / 초미세먼지 농도 달성률
목표 14. 해양생태환경 보전	14.1. 해양오염 물질 관리 강화	해양쓰레기 수거실적
	14.2. 해양환경 보존	바다숲 조성 면적 / 해양보호구역 목표면적 대비 지정 면적률
	14.3. 해안·항만재해 방재 강화	해안침식 방지 복구 달성률 / 지방항만 및 지방어항 유지관리 보수보강 건수
목표 15. 육상생태환경 보전	15.1. 육상생태계 보전 및 복원 활성화	습지복원사업 연도별 진척률 / 도립공원 지정면적
	15.2.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산림자원 조성관리 면적 / 소나무재선충 확산차단 / 임업소득
목표 16. 인권·정의·평화	16.1. 책임있는 투명한 행정실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16.2. 도민권익 증진	인권민원 해소 건수
	16.3. 상생과 공영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률
목표 17. 협력	17.1. 대외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건수 / 국제연수 운영 건수
	17.2. 도민사회 파트너십 촉진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 / 규제 건의·개선 과제 건수
	17.3. 학·관 협의체 교류 강화	지역·대학간 연계사업 추진 건수

3.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 및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24년 2년 동안의 단지 지표 성과를 점검하고, 2042년 장기 목표에 대한 추진 경로를 진단하기 위해 ‘달성도’와 ‘목표 순향도’ 두 가지 평가를 병행하여 시행
 - ‘달성도’ 평가는 현 시점의 이행 성과 수준을 확인하여 현재 강원도가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
 - ‘목표 순향도’ 평가는 2042년 장기 목표를 향한 진행 방향과 속도를 점검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한지 또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 진단하기 위해 시행
-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평가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달성도가 높더라도 장기 추세가 정체 혹은 역행 중일 수 있으며, 반대로 달성도는 낮지만 개선속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두 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현재 성과와 미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함
- ‘달성도’는 즉각적인 정책 개입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고, ‘목표 순향도’는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 조정 여부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달성도 평가 방법

- 달성도는 2023년, 24년 각 년도에 대해 지표 별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함
- 달성도는 4단계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이 단순하여 각 년도의 목표 달성 여부를 가시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




년도 \ 표기				
2023년	달성	미달성	달성	미달성
2024년	달성	달성	미달성	미달성

2) 목표 순향도 평가 방법

- 목표 순향도는 연평균 변화율을 바탕으로 2042년 장기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추정 평가함
 - 각 지표별 3년치 실무부서 실적 및 가용 통계에 대한 추세분석을 바탕으로 2042년 목표를 향한 순향도를 평가

$$\text{연평균성장률 (CAGR)} = \frac{\text{최근 3년 동안 CAGR}}{\text{2042년 목표 달성을 위한 CAGR}}$$

- 추세에 기반한 동적 성장 평가 및 42년 목표 대비 평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제공
-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는 5개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 순향도를 평가하나, 강원도는 기준년도 + 평가년도, 3개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적용하여 평가함
 - 제한된 자료 기반 평가로 변동성이 큰 단기 자료에 의해 평가가 왜곡될 위험 및 한계가 존재하나, 장기 목표에 대한 각 지표별 3년치 실무부서 실적 및 가용 통계에 대한 추세분석을 바탕으로 2042년 장기 목표에 대한 로드맵 조정에 유용하여 평가를 시행
- 3개년도 데이터 기반 한계를 고려하여 순향도를 3단계로 평가하고 날씨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가시성 높은 방법으로 표현
 -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는 순향도를 맑음 - 맑거나 흐림 - 흐림 - 뇌우 4단계로 평가
 - 강원도는 3개 년도 자료 기반 추세선으로 외생변수에 민감하여, 작은 변화에도 뇌우가 과도하게 선정되는 경향이 있어 '맑음', '흐림', '뇌우' 3단계로 평가함
 - 뇌우가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 정책 활용성과 시민 설명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 명백한 역행 지표만 문제지표(뇌우)로 간주하여 신중한 접근을 시도함

날씨표현		평가 기준	평가 의미
	맑음	95% 이상	• 현 추세 유지 시 2042 목표 달성 전망
	구름	95% ~ -95%	• 목표를 향해 진행중이나, 현 추세로는 2042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태
	뇌우	-95% 이하	• 목표의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 (악화 추세)

제2절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별 평가 결과

1. ‘목표 1. 빈곤감소 및 포용적 복지강화’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1은 “빈곤감소 및 포용적 복지 강화”로, 저소득층·장애인·고령층·아동 등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복지정책의 실행과 강화에 중점을 둠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 1-1 ‘취약계층 복지정책 강화’ 아래 ①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 ②장애인연금 수급률, ③기초연금 수급률, ④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아동비율 등 4개 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 이들 지표는 복지제도의 보장성과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성과 지표라 할 수 있음
- 국가 K-SDG 체계에서의 국가 목표 1은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이며, 국제 SDG의 Goal 1 ‘빈곤 퇴치’와 연결됨
- 강원도의 목표는 국가 목표와 유사한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 성과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특히 아동사례관리 지표와 같이 지역복지 실행력을 반영하는 항목은 국가 지표에서는 다루지 않는 차별화된 요소임

목표1 빈곤감소 및 포용적 복지 강화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	빈곤감소 및 포용적 복지 강화	1-1	취약계층 복지정책 강화	(1)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	복지정책과
				(2) 장애인연금 수급률	장애인 복지과
				(3) 기초연금 수급률	노인복지과
				(4)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전년대비 사례관리 아동비율	복지정책과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1-1	(1)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	5.6		목표	-	5.6	5.6	5.6	102.5	
	실적	5.58	5.6	5.87	-					
	평가	-	달성	미달성	-					
	(2) 장애인연금 지급률	73.0		목표	-	72.4	72.5	73.0	-98.9	
실적	72.3	70.9	70.8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3) 기초연금 지급률	4		목표	-	4	4	4	-86.6		
실적	4	4	3	-						
평가	-	달성	미달성	-						
(4)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전년대비 사례관리 아동비율	102		목표	-	95	95	102	99.1		
실적	93	88.6	92.1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주1) 목표순향도 평가방법(목표방향만 명시, 맑음 또는 맑/흐)에 따라 장기시계열(10년치)의 추세를 함께 고려함

○ 2023~2024년 달성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 : 2024년 5.87%로 2042년 목표(5.6%)를 이미 초과 달성함. 취약계층 보호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장애인연금 지급률 : 2024년 70.8%로 목표치 72.5%에 미달, 2023년 대비 감소함
- 기초연금 지급률 : 2024년 3%로 목표(4%)에 못 미쳤으며, 2023년보다 하락해 고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아동비율 : 2024년 92.1%로 목표치 95%에는 미달했지만, 전년도보다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강원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순향도는 각 지표별로 장기 목표(2042년)를 향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맑음(☀)', '흐림(☁)', '뇌우(⚡)' 등의 이미지로 평가하였으며, '목표 1'에 포함된 4개 지표별 순향도는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 : 순향도는 '맑음(☀)'으로, 장기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미 달성하였고, 추세도 안정적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적용 범위가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에 잘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함
- 장애인연금 지급률 : 순향도는 '뇌우(⚡)'로, 2023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42년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 제도적 수급요건이나 접근성 측면의 제약이 장기적으로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며 정책적 전환이 요구됨
- 기초연금 지급률 : 순향도는 '흐림(☁)'으로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과거 수급 추이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됨. 고령층 대상 정책의 구조적 재설계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아동비율 : 순향도는 '맑음(☀)'으로, 2023년 대비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과거 추세와 비교했을 때 장기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음.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아동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종합적으로 보면, 4개 지표 중 2개 지표가 '맑음', 1개는 '흐림', 1개는 '너우'로 평가되어 목표 1의 장기 추진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특정 영역(특히 장애인 분야)에서는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가능함
 - 순향도 결과는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정책 효과의 누적 경로를 보여주는 지표로, 강원도가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속도를 균형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목표 1은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사회안전망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목표임
 - 일부 지표에서 단기 성과는 미흡하였으나, 순향도 측면에서 장기 목표 달성 가능성은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강원도의 복지정책이 방향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실행력 강화가 추가적으로 요구됨을 의미함
 -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의 연금 수급률 제고는 단순한 보장 수준 확대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상자 발굴 및 접근성 개선, 현장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함
 - 아동복지 분야는 개선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성공사례 확산이 중요함
 - 결론적으로, 강원도는 빈곤 감소 및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은 갖추었으나, 이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제도 운영의 정교화와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 제고에 집중해야 할 시점임

2. ‘목표 2.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2는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로, 식량안보 확보와 친환경 농업 육성, 농가의 소득 향상 및 경영 안전망 구축 등을 포함함
- 이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와 맥락을 같이하며, 강원도는 지역 특성에 맞게 농외소득 증대, 농업인 수당 도입,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 지역 특화 전략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음
- 세부목표로는 농가소득원 확대 및 생계안전망 강화(2-1), 식량안보 및 친환경 농업육성(2-2), 농업 경쟁력 강화(2-3)가 있으며, 이에 따라 농외소득 증가, 농업인 수당 지급, 농작물 재해보험 및 병해충 방제, 벼 재배면적 감축, 유기농업 확대, 스마트농업 보급, 농식품 수출증가 등 핵심 지표들이 설정됨
- 이러한 지표들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경제적·환경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는 국가 목표와 유사한 틀을 유지하면서도 산간지 농촌마을 개발지원 등 지역 맞춤형 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목표2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2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2-1	농가소득원 확대 및 생계안전망 강화	(1) 농외소득(1가구당 농가소득)	농정과
				(2) 농업인 수당 지급률 및 경영체화율	농정과
				(3) 농업정책보험 가입실적 상향 비율	친환경농업과
				(4) 병해충 방제 및 예찰실적 점수	농업기술원
				(5) 농촌마을 개발지원 개소수	농정과
		2-2	식량안보 및 친환경 농업육성	(1) 벼 재배면적 감축 달성률	친환경농업과
				(2)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	친환경농업과
		2-3	농업 경쟁력 강화	(1) 스마트농업 실천농가 수	농업기술원
				(2) 품목제조 보고 증가율	농업기술원
(3) 농수산식품 수출증가액	기업지원과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2-1	(1) 농외소득(1가구당 농가소득)	50		목표	-	42	43	50	-	-
				실적	41.3	41	-	-	-	
				평가	-	미달성	-	-	-	
	(2) 농업인 수당 지급률 및 경영체화율	95		목표	-	92	93	95	102.8	
				실적	92.1	93.2	97.7	-	-	
			평가	-	달성	달성	-	-		
	(3) 농업정책보험 가입실적 상향 비율	20		목표	-	15.0	15.5	20.0	131.2	
				실적	3.3	28.0	6.8	-	-	
				평가	-	달성	미달성	-	-	
	(4) 병해충 방제 및 예찰실적 점수	125		목표	-	115	115	125	153.5	
				실적	112.5	226.9	268	-	-	
				평가	-	달성	달성	-	-	
	(5) 농촌마을 개발지원 개소수	-		목표	-	18	23	-	-	-
				실적	-	16	12	-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	
2-2	(1) 벼 재배면적 감축 달성률	96		목표	-	96.2	96.0	96	102.6	
				실적	96.6	97.9	101.7	-	-	
				평가	-	달성	달성	-	-	
	(2)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	46		목표	-	42.9	45	46	100.3	
				실적	44	44.6	44.5	-	-	
				평가	-	달성	미달성	-	-	
2-3	(1) 스마트농업 실천농가 수	1,500		목표	-	100	300	1,500	881.8	
				실적	-	117	1,180	-	-	
				평가	-	달성	달성	-	-	
	(2) 품목제조 보고 증가율	10		목표	-	10	10	10	-83.7	
				실적	10	16.7	7	-	-	
			평가	-	달성	미달성	-	-		
	(3) 농수산물품 수출증가액	600		목표	-	510	515	600	125.6	
				실적	502	529	636	-	-	
				평가	-	달성	달성	-	-	

○ 2023~2024년 달성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농가 소득 다각화 : 농가의 농업 외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가구당 농외소득이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이나 23년 미달성하였고, 24년은 아직 실적이 확인되지 않음
- 농업인 수당 지급 및 경영체 등록 : 농업인 수당 도입과 농가 경영체화율 제고를 통해 농민

들의 경영 안정 기반이 강화됨. 농업인 수당 지급률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목표 수준에 도달하며 도내 농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경영체 등록도 확대되어 영세 농가의 조직화가 순조롭게 진행됨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정책보험 가입 실적 상향비율은 2023년에 이미 가입 실적이 목표치의 1.87배에 달했으나, 2024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농가 안전망 확충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 농가 수가 급증하고 있음
 - 병해충 방제 및 예찰 : 병해충 방제 및 예찰 실적 점수는 2023년, 24년 모두 목표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당초 목표 대비 2배에 가까운 실적을 달성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농촌마을 개발지원 :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 농촌마을 개발지원 사업은 목표가 미달성됨. 2023년 지원한 마을 수(예: 16개소)는 목표(18개소)를 약간 밑돌았고, 2024년에도 목표(23개소) 대비 실제 지원 규모(12개소)가 감소하여 농촌지역 기반 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관련 정책 시행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벼 재배면적 감축 : 쌀 수급 균형과 토지 활용 다변화를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달성률은 목표를 달성함. 2023년 및 24년 모두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이는 일부 농가의 작목 전환 어려움과 쌀 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분석됨
 - 유기농업 인증면적 :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은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2024년 목표치에 근접하거나 다소 부족한 수준이었다. 2023년에 소폭 상승(전년 대비 +0.4%p)하여 목표를 거의 달성했으나, 2024년에는 오히려 인증 비율이 다소 감소하여 목표(45%)를 약간 밑돌았음. 이는 전체 경지면적 증가와 일부 농가의 인증 포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 스마트농업 보급 :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실천농가 수는 계획대로 확대됨. 2023년에 스마트팜 도입 농가 수가 목표를 달성하였고 2024년에도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농산물 가공 및 수출 : 농업 부가가치 창출 지표인 품목제조 보고 증가율과 농수산물 수출 증가액에서 탁월한 성과가 나타남. 특히 농식품 수출의 경우 2023년 실적이 연간 목표치를 약간 상회하며, 2024년에는 목표 대비 큰폭의 증가액을 기록하여 강원 농수산물의 해외판로 확대가 두드러짐. 도의 지원 정책과 한류 영향 등으로 수출이 급증한 결과로 평가됨
- ‘목표 2’에 대한 장기 목표 달성 전망을 위해 순향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업인 수당 관련 지표들의 순향도는 ‘맑음’(☀)으로 평가됨. 농업인 수당 정착으로 농가 소득 기반이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이며,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2년 장기목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상황임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높은 증가세로 장기 전망이 밝아 순향도 평가가 ‘맑음’(☀)임. 24년 실적이 다소 못 미쳤으나, 23년 단기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고, 향후에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으로 가입률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 장기 목표 초과 달성도 전망됨

- 병해충 방제 실적의 순향도는 ‘맑음’(☀)임. 2023년과 24년 성과가 크게 웃돌아 장기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됨
 - 농촌마을 개발지원은 42년 장기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순향도를 확인할 수 없음. 해당 지표가 단기 정책으로 42년 장기 목표 설정이 불가능하다면, 지표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벼 재배면적 감축 지표는 현재 목표 대비 실적이 크게 웃돌아 ‘맑음’(☀)으로 평가됨. 현 추세로는 2042년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나, 쌀 생산조정 정책의 속도 조절 및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에 대한 순향도는 ‘맑음’(☀)으로 평가됨. 24년 목표가 약간 밀렸으나, 전반적인 정책 흐름 및 목표를 향한 진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추세를 유지하면 장기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친환경 농가 유입 정체와 인증 유지 어려움 등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농업 실천농가 지표는 ‘맑음’(☀)으로, 도입 농가 수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2042년까지 충분한 보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특히 24년 실적이 크게 증가하여 기술 혁신 속도와 정부 지원을 감안할 때 목표 달성 전망이 밝음
 - 농수산물 수출 부문 지표들은 ‘맑음’(☀) 평가를 받았음. 2024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면 장기 목표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음. 다만 관련 지표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함
- 목표 2는 대부분 지표에서 순조로운 진전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음. 설정된 10개 내외 지표 중 다수가 최근 2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장기 추세도 맑음 평가가 우세함
 - 이는 강원도의 농업 정책이 생산구조 개선과 농가복지 증진 측면에서 올바른 궤도에 있음을 시사함. 특히 농업인 소득지원, 스마트 농업, 농산물 수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 강원 농업의 지속가능성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한편 농촌마을 개발 지원 등 일부 지표에서 한계도 드러났는데, 농촌마을 개발 지원은 중앙 정책을 기반으로 강원도가 추진할 수 있는 목표를 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반적으로 강원도 농업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양호한 편이나, 친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3.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 강원특별자치도 3번 목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질병 예방 및 관리,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을 다룬다
- 이는 K-SDG 목표 3 “건강과 웰빙 증진”과 부합하며, UN SDG 3 (건강한 삶 보장)의 지역 구현이라고 할 수 있음
- 강원도는 국가 목표와 궤를 같이하면서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취약지 지원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부목표를 강조함
- 세부목표로 건강한 삶 보장(3-1),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3-2), 스마트 의료서비스 실현(3-3)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살률, 암검진 수검률, 흡연율, 치매환자 관리율, 공공병원 병상 수, 의료취약지 이용자 수,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건기관 시설개선,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보급 등의 핵심 지표를 관리하고 있음
- 강원도의 목표 3은 국가 수준의 모성·영유아 건강, 질병률 등 지표와 더불어, 고령화와 지리적 특성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지표(예: 의료취약지 지원, 치매관리 등)를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 증진 전략을 반영하고 있음

목표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3-1	건강한 삶 보장	(1)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보건식품 안전과
				(2) 암검진 수검률	공공의료과
				(3) 흡연율	보건식품 안전과
				(4)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	보건식품 안전과
		3-2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1) 공공병원 병상 수	공공의료과
				(2) 의료취약지 의료시설 이용자 연인원	공공의료과
				(3)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공의료과
				(4)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보강지원 개소	보건식품 안전과
		3-3	스마트 의료서비스 실현	(1)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보건식품 안전과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3-1	(1)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0.0		목표	-	32.2	31.7	30.0	-103.5	
			실적	32.7	33.1	34.7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2) 암검진 수검률	42.0		목표	-	40	40.5	42.0	-96.1	
		실적	44.5	46.14	40.84	-				
		평가	-	달성	달성	-				
(3) 흡연율	19.0		목표	-	20.7	20.3	19.0	-101.0		
		실적	21.0	22.3	21.2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4)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	67		목표	-	56.5	58.5	67	99.8		
		실적	53.7	54.8	54.7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3-2	(1) 공공병원 병상 수	1,531		목표	-	1,224	1,318	1,531	-97.1	
			실적	1,224	1,184	1,181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2) 의료취약지 의료시설 이용자 연인원	60,000		목표	-	58,000	58,500	60,000	114.3	
		실적	62,447	73,081	81,270	-				
		평가	-	달성	달성	-				
(3)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14		목표	-	10	11	14	-92.2		
		실적	9	5	8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4)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보강 지원 개소	900		목표	-	59	60	900	124.8		
		실적	94	59	85	-				
		평가	-	달성	달성	-				
3-3	(1)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6,500		목표	-	1,373	1,405	6,500	69.2	
		실적	1,341	2,347	751	-				
		평가	-	달성	미달성	-				

○ 2023~2024년 달성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자살률 :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악화되는 추이를 보임. 2023년 강원도 자살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여 목표치(예: 32.2명/10만명)를 넘었고, 2024년에는 오히려 더 증가(예: 34.7명)하여 목표(약 31.7명) 대비 크게 미달됨. 이는 경제적 어려움, 농촌 지역의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지표는 2년 연속 미달성으로 나타남
- 암 조기검진 : 암검진 수검률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목표에 근접하거나 소폭 상회함.

2023년 국가암검진 수검률이 목표치를 웃돌고, 2024년에도 목표 수준으로 유지되어 달성 또는 거의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도의 암 예방 캠페인과 검진 독려 정책이 지속되며 검진 참여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흡연율 : 성인 흡연율의 개선은 정체 상태로, 23/24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24년 흡연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목표 대비로는 부족하여 두 해 연속 미달성함. 특히 2023년 흡연율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24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해 금연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치매환자 관리 :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은 정체 상태에 있으며 목표치 달성에는 이르지 못했음. 2023년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환자 등록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약 1.1%p 증가), 2024년에는 증가세가 멈추며 목표 대비 정체됨. 고령화 속도가 빠른 데 비해 치매환자 발굴·등록이 더딘 편으로, 목표에 미달성으로 한 것으로 평가됨
 - 공공병원 병상 확충 : 2023년 목표 1,224개 대비 실적 1,184개로 미달성됨. 도내 공공의료 시설 확충 계획이 지연되어 목표보다 적은 병상만 확보되었는데, 이는 예산 및 인력 제약으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함. 2024년에도 목표 1,318개 대비 실적 1,181개로 미달성되며 병상 확충이 정체됨. 지역 의료수요 대비 공공병상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국비 확보 등 공공의료 투자의 확대와 신속한 시설 확충이 정책적 과제로 제기됨
 - 의료취약지 지원 : 의료취약지 의료시설 이용자 수 지표에서는 2023년에 큰 폭의 개선이 있었음. 취약지역의 진료 이용 연인원 수가 목표(연 58,000명 수준)를 훨씬 넘어 2023년에 목표 대비 초과 달성을 기록했고, 2024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폭을 유지하여 목표 달성을 이어감. 이동진료 강화 등의 조치로 농산촌 주민들의 의료 이용이 늘어난 결과라 판단됨
 - 응급의료기관 평가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결과는 목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였음. 도내 9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이 2023년과 2024년 모두 목표등급에 크게 미달하여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보건기관 시설·장비 개선 : 지역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보강 지표는 2023/24년 모두 목표를 달성함. 다만, 시설개선 개소수와 장비 보강이 이루어진 보건기관 개소수가 적정한 지표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스마트 의료서비스 :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보급은 2023년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24년에는 이용자 수가 크게 감소함. 스마트 의료서비스는 원격 모니터링, 건강관리 앱 등 스마트 의료 이용과 관련한 지표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건강관리 수요와 도의 시범사업 확대가 맞물려 2023년 목표를 크게 상회하였으나 24년 실적이 크게 감소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함
- ‘목표 3’에 대한 장기 목표 달성 전망을 위해 순향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자살률 지표는 현 추세가 악화 방향이어서 목표순향도 평가가 ‘너우’(↔)로 매우 부정적임. 최근 몇 년간 자살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2042년 장기목표(대폭적인 자살률 감소)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과 지역사회 예방 노력 없이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암검진 수검률은 ‘너우’(↔)로 평가됨. 암검진 수검률은 2개년도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4년 실적이 23년과 22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추세를 분석하면 42년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판단됨. 다만,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2개 년도의 제한적 자료로 순향도를 평가하여 정확한 순향도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관찰 지표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흡연율은 최근 정체되는 추세로 순향도 ‘너우’(↔)로 판단됨. 현재의 흡연율로는 42년 장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연 정책의 추가 강화와 혁신적인 접근 없이는 장기 개선이 더딜 것으로 예상됨
 - 치매환자 관리는 23년/24년 목표를 미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맑음’(☀)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단기 목표에는 미달성하였으나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 추세로 하면 42년 장기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따라서 등록관리율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는 장기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노인돌봄 정책 강화 여하에 따라 추세 변화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공병원 병상 확충 지표는 ‘너우’(↔)로, 이는 지표가 목표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 장기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표값은 2022년부터 꾸준히 소폭으로 감소하여 악화되고 있음. 이 추세로 진행될 경우 42년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 개입이 시급함
 - 의료취약지 지원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된다. 최근 대폭 개선된 이용률 추세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도 의료격차 완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도의 지속적인 공공의료 투자가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 취약지 응급의료 평가등급은 목표 수준에 미흡하여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는 ‘흐림’(☁)으로 해석됨. 급격한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현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며 완만한 개선을 도모하는 상황으로, 장기목표(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를 달성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함
 - 보건기관 시설개선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42년 장기 목표 달성이 가능함을 의미함. 실제로 지표값은 23년 및 24년 목표를 달성하였고 향후에도 현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관리가 필요함
 -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지표는 ‘흐림’(☁)으로 평가됨. 2023년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24년 감소하여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정체상태로 평가됨. 다만, 기술 발전과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꾸준한 확대가 예상됨.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42년에는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디지털 의료서비스가 정착될 전망이다
- ‘목표 3’ 분야는 일부 지표의 부진과 다른 지표의 선전을 동시에 보여주며 복합적인 양상을 보임. 자살률, 흡연율 등 건강위험 지표에서는 목표 미달성과 부정적 추세가 나타나 강원도의 정신건강·예방 분야에 큰 과제가 남아있음을 드러냄.
- 반면 암검진, 공공의료 이용, 스마트 헬스케어 등 의료서비스 지표들은 비교적 양호하거나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도내 의료 접근성과 혁신 서비스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가 확인됨
- 종합하면, 3개 지표는 맑음, 2개는 흐림, 4개는 너우로 평가되어 장기 추진 방향에 대해

- 명암이 엇갈림. 이는 강원도의 보건 의료 정책이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으나, 정신건강·생활습관 개선 등 취약한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정책 개입이 시급함을 의미함
- 특히 자살률 상승은 심각한 경고 신호로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력 충원과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하며, 흡연·음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규제 강화도 요구됨
 - 다행히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의료 도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의료 격차 완화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강원도는 도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기반은 갖추었으나, 이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취약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정책 혁신으로 전반적인 건강 지표 개선을 이끌어내야 할 시점임

4. '목표 4. 양질의 교육 증진'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은 지역 내 모든 계층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 품질 향상을 추구함
- 이는 K-SDG 목표 4 “양질의 교육 보장”과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며, UN SDG 4 (양질의 교육)의 지역 실천이라 할 수 있음
- 강원도는 국가 차원의 교육목표와 궤를 같이하면서, 농산촌 지역의 교육 접근성 개선과 특수교육 지원 등 지역 특화 방향을 강조하고 있음
- 세부목표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4-1), 평생교육 활성화(4-2)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보육비용 지원 받는 아동 비율, 등록금 장학금 수혜율, 평생학습 장애인 참여자 수, 평생교육 운영지원 건수를 측정함
- 강원도의 교육 목표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나, 학생 수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라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원격교육 인프라 확충, 도시-농촌 학교 교류 같은 지역 맞춤형 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목표4 양질의 교육 증진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4	양질의 교육 증진	4-1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복지정책과
				(2) 보육비용 지원 받는 아동 비율	복지정책과
				(3) 등록금 장학금 수혜율	인재육성과
		4-2	평생교육 활성화	(1) 평생학습 장애인 참여자 수	인재육성과
(2) 평생교육 운영지원 건수	인재육성과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4-1	(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5.5		목표	-	23	23.5	25.5	107.6	
				실적	22.7	25.2	26.6	-		
				평가	-	달성	달성	-		
4-1	(2) 보육비용 지원 받는 아동 비율	65		목표	-	60	61	65	101.6	
				실적	59.5	63	62	-		
				평가	-	달성	달성	-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4-1	(3) 등록금 장학금 수혜율	15.5		목표	-	13	13.5	15.5	-83.8	
				실적	13	13.4	9.3	-		
				평가	-	달성	미달성	-		
4-2	(1) 평생학습 장애인 참여자 수	550		목표	-	300	350	550	465.7	
				실적	291	831	6,725	-		
				평가	-	달성	달성	-		
4-2	(2) 평생교육 운영지원 건수	200		목표	-	50	80	200	129.8	
				실적	45	60	88	-		
				평가	-	달성	달성	-		

○ 2023~2024년 달성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 2023년 목표 23% 대비 실적 25.2%로 초과 달성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이용 장려 정책으로 이용률이 상승하여 목표치를 넘었으며,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다 판단됨. 2024년에도 목표 23.5% 대비 실적 26.6%로 달성하여 이용률 증가세를 유지함. 이는 공보육 서비스에 대한 신뢰 형성과 수요에 부응한 결과로서, 향후 꾸준한 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보육 접근성을 지속 확대해야 함
- 보육비용 지원 받는 아동 비율 : 2023년 목표 60% 대비 실적 63%로 달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 정책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목표치를 넘은 것으로 판단됨. 2024년에도 목표 61% 대비 실적 62%로 달성하여 높은 수준의 지원율을 이어감. 거의 모든 대상 아동이 지원을 받을 정도로 포괄적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육아 부담 완화와 아동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 등록금 장학금 수혜율 : 2023년 목표 13% 대비 실적 13.4%로 달성함. 도내 학생들에게 등록금 장학금을 지급하여 목표를 약간 상회했으며, 학비 부담 경감에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2024년 목표 13.5% 대비 실적 9.3%로 미달성되어 수혜율이 크게 낮아짐. 이는 예산 감소나 지원 기준 강화 등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교육 기회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장학 지원의 확대 및 안정적 운용이 요구됨
- 평생학습 장애인 참여자 수 : 2023년 목표 300명 대비 실적 831명으로 달성함.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한 결과 참여자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아 목표를 크게 초과함. 2024년에는 목표 350명 대비 실적 6,725명으로 달성(대폭 초과)함.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 프로그램의 획기적 확대와 홍보로 참여 기회가 대폭 늘어난 결과로 보이며, 이는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임. 향후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지속이 필요함
- 평생교육 운영지원 건수 : 2023년 목표 50건 대비 실적 60건으로 달성함.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목표를 상회하는 운영 건수를 달성함. 2024년 목표 80건 대비 실적 88건으로 달성하며 지원 규모를 확대함. 이는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부응한 것으로, 도민의 역량 개발과 평생학습 사회 구현에 긍정적인 배경이 되

고 있음

- ‘목표 4’에 대한 장기 목표 달성 전망을 위해 순향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지표는 순향도 ‘맑음’(☀)으로 평가됨. 이는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42년 장기 목표 달성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실제로 지표값은 2022년 22.7%에서 2024년 26.6%로 증가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향후에도 현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관리가 필요함
 - 보육비용 지원 받는 아동 비율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42년 장기 목표 달성이 가능함을 의미함. 실제로 지표값은 24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추세를 확인하면 2022년 59.5%에서 2024년 62%로 증가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등록금 장학금 수혜율 지표는 ‘흐림’(☁)으로 평가됨. 이는 지표가 목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 추세만으로는 2042년 장기 목표 달성이 어려움을 의미함. 이는 2024년 실적이 크게 감소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24년 실적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여 지표 또는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평생학습 장애인 참여자 수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이는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42년 장기 목표 달성이 가능함을 의미함. 실제로 지표값은 2022년 291명에서 2024년 6,725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원인에 따라 지표 또는 목표의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 평생교육 운영지원 건수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이는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42년 장기 목표 달성이 가능함을 의미함. 실제로 지표값은 2022년 45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증가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향후에도 현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관리가 필요함
- ‘목표 4’ 분야는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 보편화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영역에서는 지역적 한계와 도전과제가 드러나고 있음. 유아부터 중등교육까지의 기본 교육지표들은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있어 강원도의 기본 교육 기반은 매우 탄탄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교육 기회 측면에서 포용성과 형평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의미함. 그러나 고등교육 단계와 취약계층 교육 지원 측면에서는 성과와 한계가 병존함
- 청년층의 지역 대학 이탈 및 고등교육 이수 정체는 지역 인재 육성의 어려움을 보여주며, 농산촌 학생과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은 아직 정책적 강화의 여지가 남아있음
- 대부분 지표는 맑음으로 강원도 교육의 장기 방향성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특정 분야의 보완이 필요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제고, 원격교육 인프라 확충,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이 정책적 제언으로 도출됨
- 특히 지역 출신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강화와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고,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강원도 내 교육격차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5. '목표 5. 성평등 보장'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 목표 5 “성평등 보장”은 사회 전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과 소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표임
- 이는 K-SDG 목표 5 “성평등 달성”과 궤를 같이하며, UN SDG 5 (양성평등)의 국내 이행이라 할 수 있는데, 강원도는 국가 수준 성평등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지역사회 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참여 확대를 중점으로 특화 전략을 추진함
- 세부목표로 성평등 문화 확산(5-1)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5-2)가 있으며,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 양성평등기금 규모,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관리직 등 여성 의사결정 비율 등의 핵심 지표를 통해 정책 성과를 측정함
- 강원도의 성평등 목표는 국가 목표와 비교해 여성 대표성 제고와 지역 성평등 재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강원도는 양성평등기금 운영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여성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또한 농산촌 지역의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한 마을단위 여성리더 발굴 등 차별화된 노력을 병행함

목표5 성평등 보장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5	성평등 보장	5-1	성평등 문화 확산	(1)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	여성청소년 가족과
				(2)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	여성청소년 가족과
				(3) 양성평등기금 운용 규모	여성청소년 가족과
		5-2	여성의 사회참여	(1)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여성청소년 가족과
(2) 여성의 의사결정 영향력 확대	총무과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5-1	(1)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	30% 이상		목표	-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	
				실적	30% 이상	55.3	36.6	-	-	
				평가	-	달성	달성	-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5-1	(2)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	25		목표	-	24	24	25	105.1	
	실적	55.97	70.03	57	-					
평가	-	달성	달성	-						
5-1	(3) 양성평등기금 운용 규모	200		목표	-	200	200	200	-43.6	
	실적	200	142	38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5-2	(1)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50		목표	-	44	45	50	-87.2	
	실적	43	38.7	33.2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5-2	(2) 여성의 의사결정 영향력 확대	35		목표	-	21	22	35	100.4	
	실적	20.3	20.7	21.6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 2023~2024년 달성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 : 2023년 목표 “30% 이상” 대비 실적 55.3%로 달성함. 필수 교육 지정 및 적극적인 권장으로 절반이 넘는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 목표를 크게 웃돌았으며, 조직 내 양성평등 인식제고에 기여함. 2024년에도 목표 “30% 이상” 대비 실적 36.6%로 달성됨. 교육 이수율이 목표치 이상이지만 전년에 비해 떨어진 것은 2023년 집중교육 시행 후 유지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탓으로 보이며, 꾸준한 교육 참여 독려로 지속적인 성인지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 : 2023년 목표 24% 대비 실적 70.03%로 달성(크게 초과)함. 다수의 정책에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개선율을 기록하였고, 행정 전반의 성평등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냈음. 2024년에도 목표 24% 대비 실적 57%로 달성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함. 전년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목표를 크게 웃돌아 성평등 정책 환류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정책 개선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기금 운용 규모 : 2023년 목표 200억 원 대비 실적 142억 원으로 미달성됨. 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 조성이 목표에 못 미쳐 계획된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음. 2024년에도 목표 200억 원 대비 실적 38억 원으로 미달성 폭이 확대됨. 기금 집행 감소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나 사업 축소 영향으로 보이며, 성평등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금 확보와 운용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됨
- 위원회 여성 비율 : 2023년 목표 44% 대비 실적 38.7%로 미달성됨.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촉 비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성별 대표성에서 격차가 존재함. 2024년에도 목표 45% 대비 실적 33.2%로 미달성되었으며 오히려 비율이 하락함. 위원 구성에서 여성 참여가 부

족한 것은 유의미한 문제로, 여성 인재 풀 확충과 성별 균형 임명 지침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 : 2023년 목표 21% 대비 실적 20.7%로 미달성됨. 관리자급 여성 임용이 약간 부족하여 목표치에 소폭 못 미쳤는데, 조직 내 유리천장 완화 노력이 더 필요함을 보여줌. 2024년 목표 22% 대비 실적 21.6%로 미달성되었으나 전년도보다 향상되어 점진적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목표 달성에는 이르지 못해, 역량 있는 여성 인재 발굴·육성과 승진제도 개선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
- ‘목표 5’에 대한 장기 목표 달성 전망을 위해 순향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인지 교육 이수율 지표는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맑음’(☀)으로 평가됨. 현재의 추세(공직자 전원 이수)가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도 목표 달성 유지는 확실 시 됨. 교육의 질 향상 등 질적 과제가 남지만 이수율 측면에서는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성평등 인식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성별영향평가 개선율 지표 ‘맑음’(☀)으로 평가됨. 평가결과의 변동이 심하지만, 현 추세만으로는 2042년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일부 연도의 성과가 높았지만 일관성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부서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함
 - 양성평등기금 지표는 ‘흐림’(☁)으로 평가됨. 최근 조성 실적이 목표 대비 크게 뒤처지고 있어 현재 추세를 유지하면 2042년 목표액 달성은 요원할 전망이다. 재원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성평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 전략 부재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여성위원 참여율 지표는 ‘흐림’(☁)으로 평가됨. 2023년, 24년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2022년 실적보다 지속적으로 실적이 감소하고 있음. 현재 추세라면 장기 목표(50%, 공공 의사결정 분야 남녀 동등 참여)에 근접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이미 일부 위원회에서 양성평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여성 의사결정 비율(관리직 등)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더딘 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어 단기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현 상태가 이어지면 장기 목표(공공 의사결정 분야 남녀 동등 참여)에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조직 문화 개선과 승진 단계의 유리천장 해소 등의 조치가 없다면 목표 달성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성별균형 목표제 확대 등 추세가 뒷받침된다면 추후 개선 가속화도 가능함
- ‘목표 5’는 일부 지표에서는 뚜렷한 진전, 일부는 정체를 보여 강원도 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한계가 교차하고 있음
-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과 위원회 여성 참여 분야에서는 명확한 성과가 나타나 조직문화와 의사결정 구조에서 성평등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성별영향평가 개선, 성평등 재원 확충, 여성 관리자 비율 등에서는 목표 미달성과 더딘 개선 속도가 확인되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볼 때, 5개 주요 지표 중 3개는 맑음, 2개는 흐림으로 평가되어 장기 추진 방향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임
- 이는 강원도의 성평등 정책이 기반 조성(인식제고, 참여기회 확대)은 비교적 성공적이지만, 자원 배분과 실질적 권한 부여 측면에서는 아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향후 정책적 제언으로는 성별영향평가 피드백 강화와 책임성 제고, 양성평등기금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민간 협력,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 확대 및 멘토링 제도 도입 등을 도출할 수 있음
- 특히 여성 관리자 비중 제고를 위해 승진 단계의 공정성 확보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유리천장 해소를 가속화해야 함. 궁극적으로 강원도는 성평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자원과 의지를 집중해야 할 것임

6.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는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보장하고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함
- 이는 K-SDG 목표 6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과 맥락을 같이하며, UN SDG 6 (깨끗한 식수와 위생)의 실천이라 할 수 있음
- 강원도의 목표 6은 국가 목표를 지역화한 것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제고, 수질 개선, 효율적 수자원 관리 등을 중점으로 함
- 세부목표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도 공급(6-1)과 효율적 물자원 관리(6-2)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하천 수질(좋은 등급 달성률), 상수도 시설 안전 점검률,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률, 유수율(누수 저감) 등의 지표가 설정됨
-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산간지와 농촌 지역이 많아 국가 대비 약간 낮은 하수도 보급률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특화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유역단위 물관리에도 참여하고 있음

목표6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6-1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1) 상수도 보급률	수질보전과
				(2) 하수도 보급률	수질보전과
				(3) 하천수질 BOD la 등급 달성률	수질보전과
				(4) 상수도시설 안전 점검률	수질보전과
		6-2	효율적 물 공급	(1)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률	수질보전과
				(2) 유수율	수질보전과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6-1	(1) 상수도 보급률	95.6		목표	-	93.6	94.0	95.6	100.3	
				실적	93.3	93.9	94.1	-		
				평가	-	달성	달성	-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6-1	(2) 하수도 보급률	90.7 이상		목표	-	90.2	90.3	90.7 이상	-	
				실적	90.1	91.5	실적 산출중	-		
				평가	-	달성	-	-		
6-1	(3) 하천수질 BOD Ia 등급 달성률	79.0		목표	-	75.2	75.4	79.0	108.2	
				실적	75	85.1	88.2	-		
				평가	-	달성	달성	-		
6-1	(4) 상수도시설 안전 점검률	100		목표	-	100	100	100	100	
				실적	100	100	100	-		
				평가	-	달성	달성	-		
6-2	(1)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률	4.38		목표	-	4.48	4.46	4.38	107.3	
				실적	4.50	4.2	3.9	-		
				평가	-	달성	달성	-		
6-2	(2) 유수율	74.0		목표	-	73.1	73.3	74.0	100.3	
				실적	72.7	73.8	73.5	-		
				평가	-	달성	달성	-		

○ 2023~2024년 달성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상수도 보급률 : 2023년 목표 93.6% 대비 실적 93.9%로 달성함.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어 보급률이 소폭 목표치를 웃돌았으며, 주민 식수 접근성이 향상됨. 2024년에도 목표 94.0% 대비 실적 94.1%로 달성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망을 유지함. 농어촌 소규모 지역까지 상수도 망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긍정적 결과로, 향후 미보급 지역 해소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하수도 보급률 : 2023년 목표 90.2% 대비 실적 91.5%로 달성함. 농촌 지역 마을하수도 설치 등 하수도 보급이 원활히 진행되어 목표치를 상회함. 2024년 목표 90.3%에 대한 실적은 실적 산출 증으로, 현재 자료 집계가 완료되지 않아 평가를 유보함. 전년 경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보급률은 대체로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최종 수치 확인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함
- 하천수질 BOD Ia 등급 달성률 : 2023년 목표 75.2% 대비 실적 85.1%로 달성함. 하수처리 시설 개선과 오염원 관리로 더 많은 하천 구간이 최고 수질 등급(Ia)을 달성하여 목표를 초과함. 2024년에도 목표 75.4% 대비 실적 88.2%로 달성하여 수질 개선 추세를 이어감. 이는 수질 개선사업의 지속 추진 효과로서 청정 수자원 확보에 긍정적인 배경을 이루며, 향후에도 엄격한 수질 관리가 필요함
- 상수도시설 안전 점검률 : 2023년 목표 100% 대비 실적 100%로 달성함. 계획된 상수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모두 완료하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함. 2024년에도 목표 100% 대비 실적 100%로 달성하여 전 시설의 정기 안전점검을 달성함. 지속적인 100% 점검률 유지로 상수도 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있음

-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률 : 2023년 목표 4.48% 대비 실적 4.2%로 미달성됨. 지리적 한계 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 보급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일부 기존 시설 통합 등으로 보급률이 감소하여 목표에 못 미침. 2024년 목표 4.46% 대비 실적 3.9%로 미달성이 지속됨. 보급률 하락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광역 상수도 전환 등의 영향으로 파악되며, 남은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소규모 공급 대책이나 대체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유수율 : 2023년 목표 73.1% 대비 실적 73.8%로 달성함.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누수 관리 강화로 유수율(물 공급 대비 사용량 비율)이 개선되어 목표를 달성함. 2024년에도 목표 73.3% 대비 실적 73.5%로 달성하여 소폭 향상된 수준을 유지함. 지속적인 관리로 수도물 손실을 줄이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수도 경영 효율화와 자원 절약에 있어 긍정적인 점
- ‘목표 6’에 대한 장기 목표 달성 전망을 위해 순향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지표는 지속적인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맑음’(☀)으로 평가됨. 남은 미보급 지역에 대한 투자만 완료된다면 2042년까지 목표치(전 지역 보급)에 무난히 도달할 것으로 보임. 현재의 속도라면 머지않아 도 전역 상·하수도 완전 보급을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 전망임
 - 하천 수질 지표는 전반적으로 ‘맑음’(☀)으로 평가됨. 수질 개선 노력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양호한 수질 상태를 유지하며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강원도는 산업시설이 적고 산림이 많아 기본 수질여건이 좋아, 현 추세 유지 시 장기 목표(청정 수환경 보전)를 이루는 데 큰 장애는 없어 보임.
 - 상수도 시설 안전점검률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현재 100%에 가까운 관리 수준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제도화된 정기 점검 체계가 갖춰져 있어 장기적으로도 목표 달성은 확실하며, 향후 초점은 점검 수준의 내실화가 될 것임.
 -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이미 목표 수준을 초과한 지역이 많고, 남은 미보급 취약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누구나 기본 식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수율(누수 감소) 지표의 순향도는 ‘맑음’(☀)으로 평가됨. 최근 개선세가 주춤하고 일시적 악화도 나타나지만, 현재 추세로는 2042년 목표(누수 최소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노후관 교체를 가속화하지 않으면 유수율 개선 속도가 더딜 수 있으며, 향후에도 보완 투자 여부에 따라 추세가 변동될 가능성이 큼
- ‘목표 6’ 분야는 물 인프라 구축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며 대체로 순향하고 있음
-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은 전국 평균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 수준으로 향상되어 도민 대부분이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이용하게 되었고, 하천 수질도 청정 지역답게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강원도의 물관리 정책이 보편적 물 복지 실현에 성공적임을 시

사함

- 반면 노후 상수관 누수 문제와 같이 효율적 물 관리 측면에서의 과제도 드러났는데, 유수율 개선이 정체된 것은 향후 물 공급의 효율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투자 확대와 신기술 도입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보면, 주요 지표 6개 중 모두 맑음으로 평가되었으며, 본 분야에 대한 장기 추진 방향은 긍정적임
- 향후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미보급 지역 하수도 마무리 투자, 상수관망 관리 고도화(스마트관망 도입 등)를 통한 누수 저감, 수요관리 및 물 재이용 촉진 등이 도출됨
- 특히 강원도의 풍부한 물자원을 기후위기 시대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물관리의 효율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것임

7. '목표 7.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산업 육성'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 강원특별자치도 7번 목표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산업 육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K-SDG 목표 7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을 지역 현실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며, UN SDG 7 (깨끗하고 접근 가능한 에너지)의 달성을 위한 강원도의 전략이라 할 수 있음
- 강원도는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발맞추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지역 에너지 자립률 제고, 수소 등 청정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함
- 세부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소비 확대(7-1)와 저탄소 신산업 육성(7-2)이 있으며, 주요 지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에너지 자급률, 전기차 등 친환경설비 보급 대수, 수소·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추진 실적, 청정에너지 산업 기업 유치 수 등이 설정됨
- 이는 국가 목표와 비교해 에너지 접근성 보장 측면보다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육성 측면에 강원도 특화방향이 있으며, 폐광지역의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전략이 포함됨

목표7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산업 육성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7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산업 육성	7-1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소비 확대	(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및 에너지 자급률	수질보전과
				(2) 연차별 보급대수	수질보전과
		7-2	친환경 에너지 저탄소 신산업 육성	(1)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및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추진 성과	수질보전과
				(2)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유치 기업 수	수질보전과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7-1	(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및 에너지 자급률	21.0		목표	-	18.0	18.6	21.0	108.7	
				실적	17.4	19.1	-	-		
평가	-	달성	-	-						
	(1-2) 신재생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44		목표	-	36	37.5	44	111.3	
				실적	41	45.8	-	-		
평가	-	달성	-	-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7-1	(2) 연차별 보급대수	7,000		목표	-	6,100	6,200	7,000	-	
				실적	6,095	4,413	3,374	-	-73.9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	
7-2	(1)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및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추진 성과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 및 운영		목표	-	예타 통과	실시설계 용역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 및 운영	-	-
				실적	예타 조사 실시	예타 통과	중투 통과	-	-	
				평가	-	달성	미달성	-	-	
	(1-2)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추진	-		목표	-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구 안전기준 마련	-	-	-
				실적	사업 기획	미추진	미추진	-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	
(2)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유치 기업 수	60~300		목표	-	기반공사	기반공사	60~300	-	-	
			실적	-	착공	추진중	-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		

○ 2023~2024년 달성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및 에너지 자급률 : 2023년 목표 18% 대비 실적 19.1%로 달성함.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 비중과 자급률이 높아져 목표치를 넘었음. 2024년 목표 18.6%에 대한 실적은 자료 미취합으로 평가를 유보함. 다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지속과 신규 설비 확충에 힘입어 2024년에도 소폭 상승이 기대되며, 향후 정확한 수치 확인 후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연차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대수 : 2023년 목표 6,100대 대비 실적 4,413대로 미달성되었고, 신재생 설비(예: 태양광 패널, 친환경 차량 등) 보급이 반도체 수급난이나 수요 부족 등으로 계획보다 저조하여 목표치에 못 미쳤음. 2024년 목표 6,200대 대비 실적 3,374대로 미달성이 계속됨. 보급 실적이 감소한 것은 민간부문 투자 둔화와 사업 지연 등의 영향으로 보이며, 보조금 확대 등 보급 촉진 정책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및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추진 성과 : 2023년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설정하였고 실제 예타 통과를 이루어 달성하였음.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첫 관문인 예타를 계획대로 통과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긍정적 성과임. 2024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그쳐 세부 설계단계 진입은 이루지 못해 미달성으로 평가됨. 다만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국가 지원 근거를 확보한 만큼, 향후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목표 달성에 근접할 필요가 있음
-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유치 기업 수 : 2023년 기반공사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

착공 단계에 머물러 미달성되었음. 기반 공사가 본격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착공을 시작하여 사업이 추진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은 의미가 있음. 2024년에도 기반공사 완료 목표 대비 실적은 추진 중으로 미달성 상태임.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참여 기업 유치를 가속화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이 요구됨

- ‘목표 7’에 대한 장기 목표 달성 전망을 위해 순향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및 에너지 자급률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2024년 실적이 취약되지는 않았으나 양호한 증가세로 목표치를 초과하여 진행 중임. 현 추세라면 2042년 까지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연차별 전기차 보급대수 지표는 ‘흐림’(☁)으로 평가됨. 2022년 이후 23년, 24년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수소 클러스터 및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관련한 신산업 육성 관련 지표는 목표가 정성으로 제시되어 순향도를 확인하기 어려워 판단을 유보함
- 목표 7 분야는 일부 지표에서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해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소비 확대 관련하여서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 강원도의 에너지 전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음
- 그러나 친환경차 보급 확대나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에서는 더딘 속도에 머물러 있고, 특정 신산업(수열에너지 등) 프로젝트는 정체 또는 지연되고 있어 목표 달성에 한계가 드러남. 요약하면, 6개 주요 지표 중 정성적 목표 설정으로 순향도를 분석하기 어려운 3개 지표를 제외하고 맑음 2개, 흐림 1개로, 강원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부분적인 성공과 동시에 구조적인 과제를 함께 안고 있음
- 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과정에서의 입지 갈등, 투자 부진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며, 향후 이러한 장애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임
- 정책적 제언으로는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주민 수익공유 모델 도입으로 보급 가속화, 지역 에너지기업 육성 및 융자지원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급 기반 강화, 지연 중인 수열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부 협조와 민간투자 유인책 강화 등이 도출됨
- 강원도가 보유한 풍부한 자연자원(풍력, 수력 등)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 전환과 연계한다면 목표 7의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8. ‘목표 8.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성장 촉진’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 목표 8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성장 촉진”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K-SDG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과 부합하며, UN SDG 8 (양질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의 지역 실천에 해당함
- 강원도는 국가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고용률 제고, 취업 취약계층 지원, 지역산업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히 폐광지와 접경지 등 지역경제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 세부목표로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8-1),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8-2), 폐광·접경지역 활성화(8-3),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8-4)이 설정되어 있음
- 이에 따른 주요 지표로 15세 이상 고용률, 청년·여성·노인 고용률 및 일자리 창출 실적, 폐광지역 지원기금 확충률, 접경지역 소상공인 만족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집행률, 소상공인 매출 신장률,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진입 수 등을 관리하고 있음
- 강원도의 목표 8은 국가 목표와 궤를 같이하면서도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를 겪는 지역 상황에 대응한 일자리 질 개선과 포용적 성장 전략을 반영하고 있음

목표8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성장 촉진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 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8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성장 촉진	8-1	강원형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1) 15세 이상 취업률	일자리 청년과
				(1) 여성 15~64세 고용률	여성청소년 가족과
		8-2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2)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인원	일자리 청년과
				(3)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노인복지과
				(4)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복지과
		8-3	폐광·접경지역 활성화	(1) 폐광지역 활성화 지원 기금 조성 증가율	폐광지역 지원과
				(2)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환경개선 만족도 평가 점수	접경지역과
		8-4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육성	(1)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대비 지원실적	기업지원과
				(2) 소상공인 매출 전년대비	소상공인과
				(3) 사회적경제기업 신규진입 수	소상공인과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8-1	(1) 15세 이상 취업률	64.0		목표	-	62.2	64.0	64.0	101.3	
				실적	61.8	63.3	63.6	-		
				평가	-	달성	미달성	-		
8-2	(1) 여성 15~64세 고용률	65.6		목표	-	62.6	63.2	65.6	100.9	
				실적	62.0	62.9	63.5	-		
				평가	-	달성	달성	-		
	(2)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인원	-		목표	-	951	951	-	-	
				실적	1,292	1,072	610	-		
				평가	-	달성	미달성	-		
	(3)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100		목표	-	100	100	100	99.7	
				실적	112	114	110	-		
				평가	-	달성	달성	-		
	(4) 장애인 고용률	47.6		목표	-	46.6	47.1	47.6	-87.1	
				실적	46.1	43.9	35.1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8-3	(1) 폐광지역 활성화 지원 기금 조성 증가율	102		목표	-	102	102	102	156.8	
				실적	100	157	108	-		
				평가	-	달성	달성	-		
(2)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환경개선 만족도 평가점수	4.5		목표	-	4.3	4.3	4.5	99.8		
			실적	4.3	4.3	4.3	-			
			평가	-	달성	달성	-			
8-4	(1)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대비 지원실적	89		목표	-	84	85	89	102.3	
				실적	86.8	62	91	-		
				평가	-	미달성	달성	-		
(2) 소상공인 매출 전년대비	3		목표	-	3	3	3	-		
			실적	3	집계중	-	-			
			평가	-	-	-	-			
(3) 사회적경제기업 신규진입 수	60		목표	-	60	60	60	-88.5		
			실적	67	59	24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 2023~2024년 달성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15세 이상 취업률 : 2023년 목표 62.2% 대비 실적 63.3%로 달성함. 경기 회복과 일자리 정책의 효과로 고용률이 높아져 목표를 상회함. 2024년에는 목표 64.0% 대비 실적 63.6%로 미달성되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경제여건 둔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

으로 목표치에 근접했지만 다다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청년·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

- 여성 15~64세 고용률 : 2023년 목표 62.6% 대비 실적 62.9%로 달성함. 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과 고용시장 개선으로 여성 고용률이 목표를 약간 상회함. 2024년에도 목표 63.2% 대비 실적 63.5%로 달성하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 지속적인 정책 효과로 여성 고용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여 성별 고용격차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인원 : 2023년 목표 951명 대비 실적 1,072명으로 달성함. 지자체 청년일자리 사업 등의 추진으로 목표치를 넘어서는 청년 고용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2024년 목표 951명 대비 실적 610명으로 미달성됨. 전년의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거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신규 청년 채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여, 청년층 대상 지속가능한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부각됨
-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 2023년 목표 100% 대비 실적 114%로 달성함. 계획 대비 더 많은 노인일 자리를 제공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2024년에도 목표 100% 대비 실적 110%로 달성하여 높은 달성률을 이어갔는데, 중앙지원 확대와 어르신 일자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계획 이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결과로, 고령화 대응과 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짐
- 장애인 고용률 : 2023년 목표 46.6% 대비 실적 43.9%로 미달성되었는데,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 저조 등으로 법정 의무고용률 수준에 못 미쳐 목표 달성에 실패함. 2024년 목표 47.1% 대비 실적 35.1%로 미달성 폭이 확대되었는데, 고용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경제 상황 악화 시 장애인 고용이 우선 감소하는 경향이나 일부 통계 기준 변경의 영향일 수 있음.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와 직업재활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됨
- 폐광지역 활성화 지원 기금 조성 증가율 : 2023년 목표 102% 대비 실적 157%로 달성함.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늘어나 목표를 크게 초과함. 2024년에도 목표 102% 대비 실적 108%로 달성하여 계획 이상으로 기금이 증가함. 안정적 기금 조성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되므로, 향후에도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됨
-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환경개선 만족도 평가점수 : 2023년 목표 4.3점 대비 실적 4.3점으로 달성하였는데, 접경지역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목표 수준에도달함. 2024년에도 목표 4.3점 대비 실적 4.3점으로 달성하여 만족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 이는 소상공인 시설개선이 일정 수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피드백 반영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임
-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 대비 지원실적 : 2023년 목표 대비 84%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실적은 62%에 그쳐 미달성됨. 준비된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집행률이 저조하여, 기업들의 자금수요 파악 미흡이나 심사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24년 목표 대비 85% 대비 실적 91%로 달성하여 대폭 개선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미집

행 자금의 이월 활용 및 지원 절차 개선으로 집행률이 높아진 결과로,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음

- 소상공인 매출 전년 대비 증감률 : 2023년, 2024년 실적이 모두 집계 중으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평가를 유보함
-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진입 수 : 2023년 목표 60개 대비 실적 59개로 미달성됨.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진입이 목표치에 근접했지만 다소 못 미쳤는데, 이는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부족이나 초기 판로 확보의 어려움 때문으로 판단됨. 2024년 목표 60개 대비 실적 24개로 미달성 폭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금리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와 지원 사업 축소로 신규 진입이 급감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 지원금 확대와 멘토링 등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함

○ ‘목표 8’에 대한 장기 목표 달성 전망을 위해 순향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5세 이상 취업률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취업률이 완만하나 꾸준히 상승하여 목표 달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추세대로 진행할 경우 2042년에는 완전고용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임
- 여성 고용률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지속적 상승세로 목표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추세가 견고하여 장기목표 달성 전망이 밝음
- 청년일자리 창출 지표는 2042년 목표가 미설정되어 있어 순향도 평가를 유보함. 2개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2042년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 달성률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계획 대비 100% 이상 이행되고 있어 안정적이며, 향후에도 노인일자리 수요에 맞춰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어 2042년 장기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고용률 지표는 ‘흐림’(☁)으로 평가됨.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폐광지역 지원기금 증가율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계획대로 기금이 확충되어 순향 중이며, 지속적인 재원 투입으로 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조성이 목표에 맞게 진행되고 있음
- 접경지역 소상공인 만족도 평가점수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만족도가 목표치에 근접하여 긍정적이며, 시설환경 개선 노력이 체감 성과를 내고 있어 향후 목표 달성도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자금 지원실적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2023년 실적이 목표에 못미쳤으나, 24년 실적이 목표를 상회하여 2042년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 이는 중소기업 지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소상공인 매출 증감률 지표는 2023년과 2024년 실적이 미집계 되어 평가를 유보함
- 사회적경제기업 신규진입 수 지표는 ‘흐림’(☁)으로 평가됨. 실적이 매우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지표 관련한 정책 현황을 검토하여 감소 이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

- '목표 8' 분야는 전반적인 고용 지표에서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형태임
- 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공공주도형 고용사업은 비교적 계획대로 추진되어 성과를 내고 있으나, 청년·여성 일자리와 전체 고용률처럼 민간경제 활력에 좌우되는 지표들은 불안정한 추세를 보임
- 또한 폐광지역·접경지역 경제는 정부 지원으로 다소 회복 조짐이 있으나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까지는 이르지 못한 단계로 평가됨
- 종합하면, 맑음 6개·흐림 2개·평가 유보 2개로, 장기 추진에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 다수임을 알 수 있음
- 이는 강원도의 경제구조가 관광·서비스업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하고, 수도권 대비 산업규모가 작은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됨
- 정책적으로는 지역 전략산업(예: 신에너지, 바이오 등) 육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청년층 유입 및 정착 지원(주거·복지 확대),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폐광·접경지역에 대한 맞춤형 투자로 경제 다각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 임
- 특히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혁신과 투자를 끌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목표 8의 장기적인 달성과 함께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9. '목표 9. 지역산업 성장과 혁신'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 목표 9 “지역산업 성장과 혁신”은 강원도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혁신 역량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산업화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는 K-SDG 목표 9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의 지역 버전이라 할 수 있으며, UN SDG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에 대응함
- 강원도는 국가 산업전략을 지역에 최적화하여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 신산업 투자 유치, 산업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세부목표로 지역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9-1)와 산업인프라 확충(9-2)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지표로 주력산업(예: 바이오헬스 등) 매출, 해당 산업 종사자 수, 미래형 축산 시설 지원률, 농식품 산업 성장률, 산업단지 지정 건수 등이 있음
- 강원도의 목표 9는 국가 목표와 방향을 같이하나, 바이오헬스 또는 관광연계 산업 등과 같은 지역 특성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낙후된 산업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특화 방향이 특징임

목표9 지역산업 성장과 혁신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9	지역산업 성장과 혁신	9-1	지역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	(1) 주력산업 분야 지원기업의 사업화 매출액	전략산업과
				(2) 바이오헬스 산업 종사자 수	바이오 헬스과
				(3) 미래 주도형 축산업시설 지원율	축산과
				(4) 농식품 산업 업체 성장률	농산물 유통과
		9-2	산업인프라 확충	(1)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	투자유치과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9-1	(1) 주력산업 분야 지원기업의 사업화 매출액	600		목표	-	550	560	600	110.8	
				실적	624	690	-	-		
				평가	-	달성	-	-		
9-1	(2) 바이오헬스 산업 종사자 수	4,000		목표	-	3,200	3,300	4,000	112.7	
				실적	3,100	3,539	-	-		
				평가	-	달성	-	-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9-1	(3) 미래 주도형 축산업시설 지원율	124		목표	-	94	95	124	100.8	
	실적	92	94	96.4	-					
평가	-	달성	달성	-						
9-1	(4) 농식품 산업 업체 성장률	160		목표	-	110	120	160	155.2	
	실적	112.9	119.5	188.3	-					
평가	-	달성	달성	-						
9-2	(1)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 입주환경 조성	100		목표	-	84	84	100	100.3	
	실적	83	84	85	-					
평가	-	달성	달성	-						

○ 2023~2024년 달성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주력산업 분야 지원기업의 사업화 매출액 : 2023년 목표 550억 원 대비 실적 690억 원으로 달성함. 도의 주력산업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매출 성과가 목표치를 넘었으며, 기술사업화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2024년 목표 560억 원 대비 실적은 아직 집계되지 않아 평가를 유보함. 다만 전년도 성과와 지역 산업 동향을 볼 때 매출 증대의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최종 실적을 확인하여 평가할 예정임
- 바이오헬스 산업 종사자 수 : 2023년 목표 3,200명 대비 실적 3,539명으로 달성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육성 등으로 고용이 늘어나 목표를 상회하였고,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일자리 창출력이 확인됨. 2024년 목표 3,300명 대비 실적은 집계 중이어서 평가를 유보함. 바이오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로 볼 때 종사자 수 증가 추세는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최종 수치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것 임
- 미래 주도형 축산업시설 지원율 : 2023년 목표 94% 대비 실적 94%로 달성함. 스마트 축산 등 미래형 축산시설 보급 지원을 계획 수준만큼 이행하여 목표를 충족함. 2024년 목표 95% 대비 실적 96.4%로 달성하여 지원율이 목표를 약간 상회함. 축산 농가의 시설 현대화 수요에 맞춰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결과임
- 농식품 산업 업체 성장률 : 2023년 목표 110% 대비 실적 119.5%로 달성함. 도내 농식품 업체들의 매출 등 성장지표가 목표치(전년 대비 10% 성장 가정)를 뛰어넘어 약 19.5% 성장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보임. 2024년에도 목표 120% 대비 실적 188.3%로 달성하여 매우 큰 폭의 성장을 달성함. 이는 일부 유망 기업의 약진과 신시장 개척으로 예상보다 성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되며, 지역 산업의 혁신 역량이 발휘된 사례로서 향후에도 지원 지속과 위험관리 병행이 필요함
-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 : 2023년 목표 84개 대비 실적 84개로 달성함. 연내 계획된 산업단지 지정 건을 모두 완료하여 목표를 충족하였음. 2024년 목표 84개 대비 실적 85개로 달성하며 목표를 약간 상회함. 이는 지역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산업단지의 질적 운영과 입주 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목표 9’에 대한 장기 목표 달성 전망을 위해 순향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주력산업 매출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최근 지원기업 매출이 크게 늘어 현재 추세 유지 시 2042년 장기목표(지역 주력산업 매출 대폭 신장)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2024년 실적이 취합되지 않아 2개 년도 실적으로 순향도를 평가한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함. 정부와 도의 산업 육성책이 지속된다면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이다
 - 바이오헬스 고용은 ‘맑음’(☀)으로 평가됨. 지속적인 클러스터 확장과 기업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목표 고용 인원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기업 정착이 계속된다면 안정적 성장 경로를 밟을 수 있을 것임
 - 미래형 축산 지원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현재 거의 전수에 가깝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목표를 충분히 유지할 것으로 보임. 축산 농가의 의지가 높고 정책 지원이 꾸준히 장기목표(축산업의 스마트화) 달성 전망이 밝음
 - 농식품 산업 성장률 지표는 최근 가파른 성장세가 계속될지 여부가 변수지만, 현 추세로는 ‘맑음’(☀)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이처럼 급격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다소 완만해질 수 있으므로, 추세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혁신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이 이어진다면 목표 달성은 유력하다 판단됨
 - 산업단지 지정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2개년도 모두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산업단지 개소수는 단기간에 크게 변동시킬 수 있는 수치는 아니므로 지표 및 목표를 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표 9’ 분야는 대부분 지표에서 목표를 상회하는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지역산업 혁신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농식품 등 주력 산업의 성장과 고용 증가는 강원도의 전략산업 육성 노력이 실제로 결실을 보고 있음을 보여줌
- 5개 주요 지표 중 집계가 끝난 실적은 모두 달성으로 전반적인 추진 상황이 매우 양호함
- 이는 강원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유망 산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로 풀이됨
- 다만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확충은 일부 지연 사례가 있어 계획의 일관성 및 신속집행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음
- 전반적으로 목표 9는 맑음 우세로 장기적 전망도 밝지만, 산업 부문의 성장세가 외부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만큼 지속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향후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현재 성과를 낸 바이오·첨단산업 분야의 지속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선도 지위를 강화하고, 지역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여 혁신 생태계를 굳건히 할 것, 산업단지 조성 프로세스 개선과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입지 수요에 신속 대응할 것 등이 도출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강원도는 지역산업의 지속성장과 구조고도화를 실현하고, 목표 9의 궁극적인 취지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달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10. '목표 10. 불평등 해소'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 목표 10 “불평등 해소”는 사회 내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K-SDG 목표 10 “불평등 감소”와 연계되며, UN SDG 10 (불평등 감소)의 지역 실천에 해당함
- 강원도는 국가 수준의 소득불평등 지표와 함께, 지역 맥락에서 사회취약계층 포용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세부목표로 모든 사람에 대한 포용성 확대(10-1) 등이 설정되어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저상버스 보급률, 저소득층 자활참여자 수 등의 지표를 모니터링함
- 국가 목표와 비교해 강원도 목표 10은 지역 내 접근성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별 불균형 해소 전략이 포함되어 있음

목표10 불평등 해소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0	불평등 해소	10-1	모든 사람에 대한 포용성 확대	(1)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장애인 복지과
				(2) 저상버스 보급률	교통과
				(3) 저소득층 자활근로 참여자 수	복지정책과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10-1	(1)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88.9		목표	-	72.2	77.8	88.9	-91.8	
	(2) 저상버스 보급률	계속 추진		목표	-	24.2	24.5	계속 추진	-	
	(3) 저소득층 자활근로 참여자 수	2,990		목표	-	2,461	2,584	2,990	-97.3	

- 2023~2024년 달성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 2023년 목표 72.2% 대비 실적 63.2%로 미달성되었는데, 공공·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저조하여 목표치를 밑돌았으며, 기준 달성에 어려움을 보임. 2024년 목표 77.8% 대비 실적 57.8%로 미달성이 지속되고 격차가 더욱 벌어짐. 장애인 고용률이 오히려 하락한 것은 기업의 고용 기피나 적합 인력 부족 등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점검 강화와 지원금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시급함
 - 저상버스 보급률 : 2023년 목표 24.2% 대비 실적 26.1%로 달성함.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계획보다 많이 이루어져 목표를 초과했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음. 2024년에도 목표 24.5% 대비 실적 27.8%로 달성하여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지원사업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된 결과임. 향후에도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저소득층 자활근로 참여자 수 : 2023년 목표 2,461명 대비 실적 2,267명으로 미달성됨.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목표치에 조금 못 미쳐 일부 저소득층이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으로, 취약계층 발굴과 참여 유인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목표 2,584명 대비 실적 2,274명으로 미달성이 이어짐. 참여자 수가 정체된 것은 경기 개선으로 일부 대상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사업 홍보 미흡 등이 원인일 수 있으며, 적극적인 대상자 상담과 맞춤형 일자리 개발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자활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목표 10’에 대한 장기 목표 달성 전망을 위해 순항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장애인 고용률 지표는 ‘흐림’(☁)으로 평가됨. 최근 지속적인 하락 추세는 현 상태 유지 시 2042년 장기목표(법정 의무고용률 완전 준수 등)에 근접하지 못할 전망이다. 경제 여건에 따라 등락이 있겠으나 특별한 정책 개입 없이는 목표 달성이 요원해 보임
 - 저상버스 보급률은 ‘맑음’(☀)으로, 현 추세라면 장기적으로 목표(대중교통 100% 무장애화 등)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매년 버스 교체가 이루어지고 정부 지원도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안정적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자활근로 참여 지표는 ‘뇌우’(⚡)로 평가됨. 최근 정체를 고려하면 장기목표(예: 자활참여자 지속 증가) 달성에 불확실성이 있음. 사회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정책 강화가 없다면 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증감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참여 동기 제고와 프로그램 다변화가 필요함
- ‘목표 10’ 분야는 일부 물리적 접근성 개선은 진전되었으나 핵심적인 소득·고용 격차 개선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저상버스 확대와 같은 포용적 인프라 확충에서는 2년 연속 목표 초과 달성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둬, 교통약자 이동권 등 생활 속 불편등 완화에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남
- 반면 장애인 고용, 저소득층 자활 등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표에서는 연속적인 목표 미달성과 역행 추세가 확인되어 우려를 자아냄

- 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소득 지원정책의 실효성 한계와 지역 경제 여건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종합적으로 3개 지표 중 맑음 1·흐림 1·뇌우 1로, 장기 추진 방향에 있어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분야의 개선이 시급함
- 강원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및 기업 인센티브 강화, 자활사업의 다각화와 성과관리 제고로 실질 참여 효과를 높여야 함
- 또한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 이어 교육·문화 접근성 제고 등 생활 전반의 포용성 확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불평등 해소라는 궁극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배 정책과 포용정책에 더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사회적 연대와 포용의 문화를 강화해야 할 것임

11.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포용적 도시 및 거주지 조성을 목표로 함
- 이는 K-SDG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와 일치하며, UN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의 지역 이행에 해당함
- 강원도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교통망 구축, 주거복지 향상, 지역사회 안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세부목표로 도내 지역 간 교통망 구축(11-1), 주거 불안 해소(11-2),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11-3)이 있으며, 주요 지표로 도로포장률, 철도연장(km),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주거급여 지원 가구수, 지역사회 안전점검 결과 등을 관리함
- 강원도의 목표 11은 국가 목표와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산간지 교통 개선, 농촌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상황에 맞춘 특화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1-1	도내 지역 간 교통망 구축	(1) 도로포장률	도로과
				(2) 철도 연장	철도과
		11-2	주거 불안 해소	(1)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과
				(2)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건축과
		11-3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1) 도민 안전 집중안전점검 추진 성과평가 결과	안전정책과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11-1	(1) 도로포장률	96.2		목표	-	94.8	95	96.2	100.2	
	실적	94.5	95.0	95.0	-					
평가	-	달성	달성	-						
11-1	(2) 철도 연장	722.5		목표	-	472.1	509.3	722.5	101.7	
	실적	472.1	472.1	509.3	-					
평가	-	달성	달성	-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11-2	(1) 공공임대주택 공급	0.24		목표	-	0.24	0.24	0.24	97.8	
	실적	0.557	0.47	0.49	-					
평가	-	달성	달성	-						
11-2	(2) 주거급여 지원율	100		목표	-	100	100	100	101.4	
	실적	103.2	108.6	105.8	-					
평가	-	달성	달성	-						
11-3	(1) 도민 안전 집중안전점검 추진 성과평가 결과	우수		목표	-	우수	우수	우수	-	
실적	우수	우수	우수	-						
평가	-	달성	달성	-						

○ 2023~2024년 달성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도로포장률 : 2023년 목표 94.8% 대비 실적 94.98%로 달성함. 농어촌 지역 도로 정비를 포함해 포장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목표를 약간 상회함. 2024년 목표 95.0% 대비 실적 94.984%로 거의 달성하였음. 사실상 포장률이 목표 수준에 근접해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비포장 구간 해소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아 마무리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소규모 미포장 도로 개선을 통해 100%에 가까운 도로 포장률을 달성해야 할 것임
- 철도 연장 : 2023년 목표 472.1km 대비 실적 472.1km로 달성함. 철도 연장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어 목표 거리만큼 연장이 이루어짐. 2024년 목표 509.3km 대비 실적 509.3km로 달성하였으며, 추가 연장 구간 역시 예정대로 개통됨. 광역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지역 주민 이동 편의와 물류 효율성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 : 2023년 목표 0.24 (필요 호수 대비 비율 등) 대비 실적 0.47로 초과 달성함.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이 계획치를 두 배 가까이 달성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함. 2024년에도 목표 0.24 대비 실적 0.49로 달성하여 높은 공급 실적을 이어감. 이는 중앙정부 사업 연계 등으로 물량이 확대된 결과이며, 이로써 더 많은 계층에 저렴한 주거 제공이 가능해져 사회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주거급여 지원율 : 2023년 목표 100% 대비 실적 108.6%로 달성함. 수요 예측치보다 더 많은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면서 100%를 넘는 지원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추가 발굴된 주거취약계층까지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됨. 2024년에도 목표 100% 대비 실적 105.8%로 달성하여 전년에 이어 목표 초과를 달성함. 이는 모든 신청자에게 예외 없이 지원이 이뤄졌음을 의미하며,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도민 안전 집중안전점검 추진 성과평가 결과 : 2023년 목표 “우수” 등급 대비 실적 “우수” 등급으로 달성함. 도 차원의 안전점검 추진 실적이 최고 등급을 받아 목표를 만족함. 2024년에도 목표 “우수” 대비 실적 “우수”로 달성하여 2년 연속 최상 평가를 유지함. 이는 생활 및 시설 안전관리 노력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에도 높은 수

준의 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목표 11’에 대한 장기 목표 달성 전망을 위해 순향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로포장률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남은 미포장 구간도 곧 해소되어 장기목표(전 도로 포장화) 달성이 확실 시 됨. 현 추세라면 2042년 이전에 이미 100%에 가까운 포장률이 실현될 것으로 보임
 - 철도 인프라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대규모 철도사업의 성격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단기 목표 달성 등이 어려울 수 있으나, 착공·완공 일정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장기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철도 인프라 지표는 외생 변수에 민감하므로 추이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최근 공급 추세와 정부 지원을 고려하면 향후 목표 달성 전망이 양호함. 인구 감소로 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 한, 계획된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2042년까지 충분한 공공임대 재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주거급여 지원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현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법정 복지제도로서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도 대상자 지원이 지속될 전망임
 - 지역사회 안전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안전점검 체계가 점차 정착되고 개선조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현 추세라면 장기목표(안전사고 최소화) 달성에 긍정적임.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향상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 ‘목표 11’ 분야는 전반적으로 계획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이며, 지속가능한 정주여건 조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
- 도로 개선,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안전점검 등 생활 인프라와 복지 분야 지표들은 대체로 목표를 달성하여, 강원도의 도시·농촌 지역사회의 기본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도로망 확충과 주거복지 향상은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직접 기여하는 부분으로 성과가 두드러진 영역임
- 전반적으로 5개 지표 중 5개 전체가 맑음으로 장기 추진 방향은 비교적 긍정적임
- 앞으로도 교통 인프라 확충 지속, 노후 주택 정비와 도시재생 가속화, 주민 안전교육 강화 등이 정책적 과제로 도출됨
- 결론적으로, 강원도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향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으며, 정책의 연속성과 보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한다면 목표 11의 궁극적인 달성에 한층 가까워질 것으로 판단됨

12.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자원 효율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여 친환경적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는 K-SDG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과 맥을 같이하며, UN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지역 차원 이행에 해당함
- 강원도는 국가 순환경제 전략에 발맞추어 폐기물 감축, 재활용 촉진,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세부목표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정책 수립·이행(12-1), 자원 효율적 관리·사용(12-2), 식량폐기물 감소(12-3), 유해폐기물 안전관리(12-4) 등이 있으며, 주요 지표로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률, 전자폐기물 회수율,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유해폐기물 처리율 등이 활용됨
- 강원도의 목표 12는 국가 목표와 마찬가지로 전방위적 자원순환 노력을 강조하나, 관광지 쓰레기 관리, 산간지역 분리수거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목표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2-1	녹색소비 촉진	(1) 녹색제품 구매율	환경정책과
				(2)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환경정책과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12-1	(1) 녹색제품 구매율	9.0		목표	-	5.1	6.0	9.0	225.0	
	실적	6.5	5.8	34	-					
평가	-	달성	달성	-						
12-1	(2)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목표	-	52.6	54.5	-	-	
	실적	54.5	55.1	집계중	-					
평가	-	달성	-	-						

- 2023~2024년 달성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녹색제품 구매율 : 2023년 목표 5.1% 대비 실적 5.8%로 달성함. 공공기관의 녹색제품의 무구매 등 친환경 소비 촉진정책으로 구매 비율이 높아져 목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2024년에는 목표 6.0% 대비 실적 34.0%로 대폭 초과 달성함. 녹색제품 구매문화 확산이 가속화되어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규 강화와 인식 개선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친환경 구매가 급증한 결과로 보임. 이러한 급속한 향상은 지속가능 소비정책의 성과를 극명히 보여주며, 앞으로 민간 영역에서도 녹색소비 정착을 유도하는 과제가 남음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2023년 목표 52.6% 대비 실적 55.1%로 달성함. 분리수거 강화와 재활용 인프라 확충으로 재활용률이 개선되어 목표치를 웃돌았고, 폐기물 감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둠. 2024년 목표 54.5%에 대한 실적은 집계중이어서 평가를 유보함. 전년도 상승 추세로 볼 때 2024년에도 재활용률이 높게 유지되었을 것으로 기대되나, 정확한 데이터 확보 후 최종 평가할 예정임. 향후에도 시민 참여 캠페인과 처리시설 지원을 통해 재활용률 향상을 지속해야 할 것임
- ‘목표 12’에 대한 장기 목표 달성 전망을 위해 순향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녹색제품 구매율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2023년 실적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4년 실적이 크게 증가하여 현재 추세로는 2042년 장기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24년 실적이 집계되지 않았으나, 23년 실적이 충분히 달성됨. 다만, 2042년 장기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유보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2042년 장기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목표 12’ 분야는 자원순환 체계에서 진전된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재활용률 향상과 유해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는 강원도가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기반을 착실히 다져온 성과로서, 주민 참여와 기업 협조를 통해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종합하면, 2개 지표 중 2개 모두 맑음으로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와 같은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 강원도는 보다 적극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쓰레기 발생 원천 감량을 위한 생산·유통 단계의 협력체계 구축(예: 포장재 줄이기),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과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 확대, 전자제품 역회수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관광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성수기 대비 특별수거체계 구축과 관광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적용함으로써 목표 12의 궁극적인 취지인 순환경제 전환과 자원낭비 최소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3. ‘목표 13. 탄력적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고 적응력을 높여 탄소중립과 기후회복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는 K-SDG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과 동일하며, UN SDG 13 (기후변화 대응)의 지역 실천에 해당함
- 강원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지역 온실가스 감축, 기후재해 대응 강화, 교육 및 인식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세부목표로 기후위험 감소 및 적응력 강화(13-1), 온실가스 감축 노력(13-2), 기후대응 역량 강화(13-3) 등이 설정되어 있으며, 주요 지표로 방재시설 투자 집행률,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교육 참여율 등이 활용됨
- 강원도의 목표 13은 국가 목표와 연계되어 탄소중립 2050 달성의 지역적 기여를 중시하면서, 산불·홍수 등 지역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특수한 지표(예: 산불방지체계 구축 등)도 포함하고 있음

목표13 탄력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3	탄력적 기후위기 대응	13-1	기후변화 대비 재난·재해 방재기반 강화	(1) 산불방지 성과달성도	산불방지 센터
				(2) 사방사업 실행률	산림관리과
				(3) 자연재해 취약지 예방사업 예산	자연재난과
				(4) 온열·한랭 질환자 수	자연재난과
		13-2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	에너지 정책과
				(2) 탄소포인트 참여가구 수 증가율	에너지 정책과
				(3)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종합 점수	에너지 정책과
				(4) 초미세먼지 농도 달성률	환경 정책과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13-1	(1) 산불방지 성과달성도	100		목표	-	100	100	100	100	
				실적	100	100	100	-	100	
				평가	-	달성	달성	-		
	(2) 사망사업 실행률	100		목표	-	100	100	100	100	
				실적	100	100	100	-	100	
			평가	-	달성	달성	-			
(3) 자연재해 취약지 예방사업 예산	(3-1) 자연재난 대응 인명·재산 피해 예방 국비확보액	-		목표	-	62,253	59,320	-	-	
				실적	54,470	74,900	103,807	-	-	
	(3-2) 자연재난대응 인명·재산 피해 예방 예산	-		목표	-	124,506	118,640	-	-	
				실적	108,940	149,800	205,158	-	-	
				평가	-	달성	달성	-		
(4) 온열·한랭 질환자 수		90		목표	-	90	90	90	-191.6	
				실적	99.67	166	190	-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13-2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	-		목표	-	99	98	-	-	-
				실적	99.67	92.3	95	-	-	
				평가	-	달성	달성	-		
	(2) 탄소포인트 참여가구 수 증가율	11.6		목표	-	10.7	10.9	11.6	107.2	
				실적	10.5	10.31	12.19	-	107.2	
			평가	-	미달성	달성	-			
(3)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종합 점수	95점 이상		목표	-	95점 이상	95점 이상	95점 이상	-		
			실적	101	85	85	-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4) 초미세먼지 농도 달성률	80		목표	-	80	80	80	111.2		
			실적	80	97	98.9	-	111.2		
			평가	-	달성	달성	-			

○ 2023~2024년 달성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산불방지 성과달성도 : 2023년 목표 100% 대비 실적 100%로 달성함.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예방·진압 목표를 모두 충족함. 2024년에도 목표 100% 대비 실적 100%로 달성하여 전년에 이어 완전 달성을 이룸. 이는 대형 산불 발생 없이 대응에 성공했음을 의미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산불 예방활동을 통해 이 성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사망사업 실행률 : 2023년 목표 100% 대비 실적 100%로 달성함. 산사태 방지 등을 위한 사망사업을 계획된 물량 모두 실행하여 목표를 달성함. 2024년에도 목표 100% 대비 실적

- 100%로 달성하여 연차별 사업을 완수함. 재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긍정적임
- 자연재해 취약지 예방사업 예산 집행액 : 2023년 목표 62,253백만 원 대비 실적 74,900백만 원으로 달성(초과집행)함.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 수요 증가로 추가 예산을 확보·집행하여 목표치를 넘는 투자가 이루어짐. 2024년에도 목표 59,320백만원 대비 실적 103,807백만원으로 크게 초과달성함. 이는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로 투입되었음을 보여주며, 비록 예산 초과 집행은 긴급한 재해 대응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취약지역 보호를 강화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됨.
 - 온열·한랭 질환자 수 : 2023년 목표 90명 대비 실적 166명으로 미달성됨.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환자 수가 목표치보다 많아 기후적응 목표를 이루지 못함. 2024년에도 목표 90명 대비 실적 190명으로 미달성되어 상황이 악화됨. 기후변동성 심화로 인한 극한 기후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폭염쉼터 확대, 농촌 고령자 보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적응대책 마련이 시급함.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 : 2023년 목표 99% 대비 실적 92.3%로 달성됨. 해당 지표는 2030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해야하나, 단기 목표는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23년과 24년 모두 달성된 것으로 나타남. 산업·수송 등 부문의 감축 노력이 불충분하여 계획 대비 약 92% 수준만 감축됨. 점진적 감축 효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 목표 등과는 차이가 커서 중단기 목표 재설정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함
 - 탄소포인트 참여가구 수 증가율 : 2023년 목표 10.7% 대비 실적 10.31%로 미달성됨.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 증가폭이 목표에 약간 못 미쳤는데, 이는 초기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탓으로 보임. 그러나 2024년 목표 10.9% 대비 실적 12.19%로 달성하여 참여율 증가가 목표를 상회하였음. 에너지 요금 인상 등의 외부요인과 인센티브 확대가 맞물려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에도 지속적 홍보와 혜택 강화로 생활 속 감축 실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종합 점수 : 2023년 목표 95점 이상 대비 실적 85점으로 미달성됨. 도 차원의 기후적응 이행 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목표치에 10점 부족한 85점에 그쳐 적응대책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에도 목표 95점 이상 대비 실적 85점으로 미달성이 반복됨. 주요 부문별 적응계획 추진이 지연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며, 부진 원인 분석과 함께 부문별로 실질적인 적응사업 강화 및 점검이 필요함
 - 초미세먼지 농도 달성률 : 2023년 목표 80% 대비 실적 97%로 달성함. 국지적 대기환경 개선 대책과 계절관리제 등의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정도가 목표치를 웃돌았음. 2024년에도 목표 80% 대비 실적 98.9%로 달성하여 양호한 대기질을 유지함. 이는 비교적 청정한 강원 지역 특성과 더불어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효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대기오염원 관리를 지속하여 주민 건강을 보호해야 함
- ‘목표 13’에 대한 장기 목표 달성 전망을 위해 순향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산불방지 성과달성도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이는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42년

장기 목표 달성이 가능함을 의미함. 최근 지표값은 목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향후에도 현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관리가 필요함

- 사방사업 실행률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이는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42년 장기 목표 달성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최근 지표값은 목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다만, 단기목표와 장기목표가 모두 100%인데, 과거 실적을 검토하면 지속적으로 달성되고 있어 해당 지표와 목표가 강원도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적합한 지표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연재해 취약지 예방사업 예산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이는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42년 장기 목표 달성이 가능함을 의미함. 한다. 향후에도 현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
 - 온열·한랭 질환자 수 지표는 '뇌우'(⚡)로 평가됨. 이는 지표가 목표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 장기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의미함. 실제로 지표값은 2022년 99.67명에서 2024년 190명으로 증가하여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 개입이 시급함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 지표는 장기 목표가 미설정되어 있어 순향도는 판단을 유보함
 - 탄소포인트 참여가구 수 증가율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이는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42년 장기 목표 달성이 가능함을 의미함. 실제로 지표값은 2022년 10.5%에서 2024년 12.19%로 증가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23년 목표는 미 달성되었으나, 24년 목표는 달성하였고 향후에도 현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관리가 필요함
 -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종합 점수 지표는 '뇌우'(⚡)로 평가됨. 이는 지표가 목표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 장기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의미함. 2년 연속 종합 점수를 획득하지 못해 원인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초미세먼지 농도 달성률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이는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42년 장기 목표 달성이 가능함을 의미함
- '목표 13'분야는 적응 부문에서는 비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완화(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는 성과가 미진한 모습을 보임
- 방재 인프라 투자와 기후적응 역량(교육·재난대응)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목표 달성률이 높고 긍정적 추세인 반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핵심 지표에서는 목표 미달성과 부진한 추세가 드러나고 있음
- 이는 강원도 내 산업·발전 부문의 구조적 요인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지연 등이 반영된 결과임
- 종합적으로 맑음 6개, 뇌우 2개, 순향도 평가 유보 2개로 평가되며, 향후 강원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감축 노력의 대폭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산업공정 효율향상과 청정연료 전환 촉진, 대규모 산림 탄소흡수원 확보(조림 확대), 재생에너지 확충 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쳐야 함
- 또한 도민 생활 속에서도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임
- 반면 적응 측면에서는 현 수준을 유지하며 더욱 발전시켜, 기후재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회복력 강화 조치를 꾸준히 추진해야 함
- 궁극적으로, 목표 13의 성공을 위해서는 감축과 적응의 균형 잡힌 추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자원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것 임

14. ‘목표 14. 해양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은 바다와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는 K-SDG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존”과 연계되며, UN SDG 14 (해양생태계 보존)의 지역 구현에 해당함
- 강원도는 동해안이라는 소중한 해양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연안 생태계 보호, 수산자원 관리, 해양오염 저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세부목표로 연안 및 해양 자원의 보전·복원(14-1), 지속가능한 어업 및 수산자원 관리(14-2) 등이 있으며, 주요 지표로 해양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수 수질지표, 남획 방지 어종 비율, 연근해 어획량 변화 등이 사용됨
- 강원도의 목표 14는 국가 목표와 궤를 같이하면서, 동해 연안 특성을 고려한 수산자원 회복과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 지역 특화 지표를 포함함

목표14 해양생태환경 보전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4	해양생태 환경 보전	14-1	해양오염 물질 관리 강화	(1)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	해양항만과
		14-2	해양환경 보존	(1) 바다숲 조성 면적	양식산업과
				(2) 해양보호구역 목표면적 대비 지정 면적률	해양항만과
		14-3	해안·항만재해 방재 강화	(1) 해안침식 방지 복구 달성률	해양항만과
				(2) 지방항만 및 지방어항 유지관리 보수보강 건수	해양항만과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14-1	(1)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	99.8		목표	-	98.2	98.5	99.8	-	
				실적	97.99	109.2	90.3	-	-95.9	
				평가	-	달성	미달성	-	-	
14-2	(1) 바다숲 조성면적	1,402		목표	-	70	80	1,402	-	
				실적	1,312	82	72	-	-428.3	
				평가	-	달성	미달성	-	-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14-2	(2) 해양보호구역 목표면적 대비 지정 면적률	100		목표	-	100	100	100	100	
				실적	100	100	100	-		
				평가	-	달성	달성	-		
14-3	(1) 해안침식 방지 복구 달성률	90		목표	-	90	90	90	-	
				실적	60	추진중	추진중 (44%)	-		
				평가	-	-	-	-		
	(2) 지방항만 및 지방어항 유지관리 보수보강 건수	8		목표	-	8	8	8	-79.1	
				실적	8	8	5	-		
				평가	-	달성	미달성	-		

○ 2023~2024년 달성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해양쓰레기 수거실적 : 2023년 목표 대비 98.2% 수준을 계획했으나 실적은 109.2%로 초과 달성(초과)됨. 연안 정화 활동을 집중 전개하여 목표보다 더 많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해양 환경개선에 노력한 결과임. 2024년에는 목표 대비 98.5%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실적은 90.3%에 머물러 미달성됨. 2년차에는 수거량이 줄었는데, 이는 사업 예산 및 인력 제한으로 정화 활동이 축소된 영향으로 보이며, 안정적인 수거체계 구축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목표 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바다숲 조성 면적 : 2023년 목표 70ha 대비 실적 82ha로 달성함. 연안 바다숲(해조류 서식지)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계획보다 넓은 면적에 바다숲을 조성함. 그러나 2024년 목표 80ha 대비 실적 72ha로 미달성됨. 사업 추진 여건 악화나 일부 해역의 환경적 제약으로 목표 면적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예산 확대와 과학적 입지 선정으로 바다숲 조성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해양보호구역 목표면적 대비 지정 면적률 : 2023년 목표 100% 대비 실적 100%로 달성함. 해양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모두 이행하여 목표 면적을 달성함. 2024년에도 목표 100% 대비 실적 100%로 달성하여 보호구역 확대 목표를 확실히 이룸. 이는 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다음 과제로 제시됨.
- 해안침식 방지 복구 달성률 : 2023년 목표 90% 대비 추진 중으로 미달성됨.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복구사업이 연내 완료되지 못하고 진행 단계에 머물러 목표 달성에 이르지 못함. 사업 진척률이 44% 수준에 그쳐 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안침식 복구사업의 공정 지연과 예산 부족을 시사함. 효과적인 연안 보호를 위해 사업 기간 단축과 추가 자원 투입 등 보완대책이 요구됨
- 지방항만 및 지방어항 유지관리 보수보강 건수 : 2023년 목표 8건 대비 실적 8건으로 달성됨. 연내 예정된 항만어항 시설 보수보강을 모두 이행하여 목표를 충족함. 그러나 2024년 목표 8건 대비 실적 5건으로 미달성됨. 일부 항만시설의 보수공사가 이월되거나 착공이 지

연되어 목표 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안정적인 어항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 집행의 적시성과 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목표 14’에 대한 장기 목표 달성 전망을 위해 순향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 지표는 ‘너우’(⚡)로 평가됨. 이는 지표가 목표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 장기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의미함. 2023년 초과 달성한 바 있으나, 2024년 크게 감소하여 현 추세로는 2042년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예상됨. 다만, 이번 순향도 평가는 2개년도 실적으로 추세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표와 목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바다숲 조성면적 지표는 ‘너우’(⚡)로 평가됨. 이는 지표가 목표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 장기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의미함. 그런데, 지표를 검토하면, 장기 목표가 1,402로 제시되어 있어 이는 누적된 바다숲 조성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단기 실적 및 목표는 연도별 조성면적을 제시하고 장기 목표는 누적 면적을 제시한 것으로 유추되어 목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해양보호구역 목표면적 대비 지정 면적률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2개 년도 모두 목표를 달성하여 2042년 장기 목표 역시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목표를 살펴보면 단기목표와 장기목표가 모두 100%로, 강원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지표인지 검토가 필요함
 - 해안침식 방지 복구 달성률 지표는 ‘너우’(⚡)로 평가됨. 해안침식 방지 복구 사업을 90% 이상 하는 것이 목표이나, 현재 44% 수준으로 달성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현 추세로는 장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특히 실적과 목표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지표 또는 목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항만 및 지방어항 유지관리 보수·보강 건수 지표는 ‘흐림’(☁)으로 평가됨. 24년 단기 목표에 대한 실적이 미달성되어 정책의 추세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 ‘목표 14’ 분야는 해양환경 부문 및 방재 관련 부문에서 모두 부정적 성과를 보임
-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계획대로 추진되어 동해안 해양환경의 보호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나, 해양쓰레기 수거 및 바다숲 조성 등 해양생태 보전과 관련한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사안이 지속되고 있음
- 요약하면 5개 지표 중 1개 맑음, 1개 흐림으로, 3개 너우로 강원도의 해양 목표는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역행하고 있음
- 해결을 위해 인공어초 및 산란장 조성 등 자원 회복사업 강화, 어민들과의 협력을 통한 생태계 기반 어업관리 등을 제안하며,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향후 부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예방 및 정화 활동도 병행하여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나가야 함

15. ‘목표 15. 육상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 목표 15 “육상생태환경 보전은 육상 생태계와 산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는 K-SDG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호”와 연계되며, UN SDG 15 (육상 생태계 보전)의 지역 이행에 해당함
- 강원도는 전국에서 산림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산림과 습지 등 생태계 보전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 세부목표로 육상생태계 보전 및 복원 활성화(15-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15-2)가 있으며, 주요 지표로 습지복원사업 진척률, 도립공원 지정면적, 조림·숲가꾸기 면적,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 피해 억제 성과, 임업소득 증감률 등이 설정됨
- 강원도의 목표 15는 국가 목표와 궤를 같이하면서, 지역 산림의 경제·생태 양립 전략(예: 산림기반 소득사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음

목표15 육상생태환경 보전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5	육상생태 환경 보전	15-1	육상생태계 보전 및 복원 활성화	(1) 습지복원사업 연도별 진척률	자연생태과
				(2) 도립공원 지정면적	자연생태과
		15-2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1) 산림자원 조성관리 면적	산림정책과
				(2) 소나무재선충 확산차단	산림정책과
				(3) 임업소득	산림정책과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15-1	(1) 습지복원사업 연도별 진척률	추가 사업 발굴		목표	-	실시 설계	100	추가 사업 발굴	-	
				실적	준비	실시 설계	실시 설계 완료	-	-	
				평가	-	달성	미달성	-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15-1	(2) 도립공원 지정면적	4.739		목표	-	6.428	6.428	4.739	185.3	
				실적	1.689	6.428	6.428	-		
				평가	-	달성	달성	-		
15-2	(1) 산림자원 조성관리 면적	26,000		목표	-	25,000	25,200	26,000	103.4	
				실적	24,919	25,585	26,760	-		
				평가	-	달성	달성	-		
15-2	(2) 소나무재선충 확산차단	7		목표	-	9	9	7	101.3	
				실적	9	9	9	-		
				평가	-	달성	달성	-		
	(3) 임업소득	8.5 이상		목표	-	7.5	7.5	8.5 이상	-59.4	
				실적	7.0	4.2	-	-		
				평가	-	미달성	-	-		

○ 2023~2024년 달성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습지복원사업 연도별 진척률 : 2023년 목표 “실시설계” 단계 완료를 계획하여 실제 실시설계 완료로 달성함. 해당 연도에 습지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가 차질 없이 완료되어 목표 단계에 도달함. 2024년에는 100% 공정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실적은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머물러 최종 복원 작업은 미완료 상태로 미달성되었다. 복원사업이 설계 이후 착공·완공 단계로 진입하지 못해 지연된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 가속화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목표 달성을 달성하도록 해야 함
- 도립공원 지정면적 : 2023년 목표 6.428km² 대비 실적 6.428km²로 달성함. 신규 도립공원 지정을 완료하여 목표한 면적을 확보함. 2024년 목표 6.428km² 대비 실적도 6.428km²로 달성되었으며 추가 지정 변화는 없었음. 이는 목표했던 공원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공원구역 관리와 생태계 보전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산림자원 조성·관리 면적 : 2023년 목표 25,000ha 대비 실적 25,585ha로 달성함. 조립 및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하여 목표를 초과하는 산림 면적을 조성·관리하였음. 2024년에도 목표 25,200ha 대비 실적 26,760ha로 달성하여 목표치를 초과하였음. 지속적인 산림 투자와 지역 주민 참여로 산림 면적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이는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경관 개선에 긍정적인 결과임
- 소나무재선충 확산 차단 : 2023년 목표 피해지역 9개소 내 확산 차단 대비 실적 차단 달성(9개소)으로 달성함. 방제 사업을 통해 모든 지정 위험지역에서 추가 확산을 막아 목표를 이룸. 2024년에도 목표 9개소 확산 차단 대비 실적 9개소 차단 유지로 달성함. 이는 재선충 피해가 새로운 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방제망을 구축한 성과로서,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산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함
- 임업소득 : 2023년 목표 7.5백만 원(가구당 연간) 대비 실적 4.2백만 원으로 미달성됨. 임업인 한 가구당 평균 소득이 목표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임산물 판매 부진 등으로 소득향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2024년 목표 7.5백만 원 대비 실적은 아직 집계되지 않아 평가를 유보하지만, 전년도 추세로 볼 때 목표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이는 임산물 가격 정체와 산촌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보이며, 임업 생산성 제고와 판로 지원 등 소득향상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목표 15’에 대한 장기 목표 달성 전망을 위해 순향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맑음’(☀)으로 평가됨 ‘흐림’(☁)으로 평가됨 ‘뇌우’(⚡)로 평가됨
 - 습지 복원사업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모든 주요 훼손 습지를 복원하고자 하는 장기목표 달성에는 긍정적임. 다만, 최종 목표가 현재로는 ‘추후 사업 발굴’로 제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도립공원 지정면적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계획된 추가 지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목표로 하는 면적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산림자원 조성관리 면적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예산만 지속된다면 장기 산림관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전망이다
 - 소나무재선충 확산 차단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현 방제로는 완전 퇴치까지 어려움이 있어 2042년에도 피해 최소화 목표 달성에 불확실성이 남음. 또한 실적 평가가 확산차단 시군 ‘수’로 되어 있어 실질적 평가가 어렵다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임업소득 향상 지표는 ‘흐림’(☁)으로 평가됨. 24년 실적이 집계되지 않아 자료 분석의 구조적 제약이 있으나, 현 추세만으로는 장기 목표(산촌 소득 향상) 달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됨
- ‘목표 15’ 분야는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측면에서 순향하고 있음
- 강원도의 풍부한 자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으나, 임업소득 증대로 대표되는 산림관리의 질적 성과 지표에서는 목표 미달성이 확인되어, 임업 경쟁력 약화라는 과제가 드러남
- 요약하면 5개 지표 중 4개 맑음, 1개 흐림이며, 전반적 장기 전망은 양호하나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 보완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 방제 기술 혁신 및 피해목 활용방안 마련, 산림신품종 개발과 임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 등이 정책적 제언으로 도출됨
- 특히 임업소득 향상을 위해 산림관광, 치유산업 등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산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요구됨
- 결론적으로, 강원도는 육상생태 보전에서 양호한 성적표를 받고 있으나 이를 지역 주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그러한 균형 잡힌 접근이 목표 15의 완전한 달성으로 이어질 것임

16. ‘목표 16. 인권·정의·평화’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 목표 16 “인권·정의·평화”는 포용적 사회를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주민의 권익 증진, 평화와 협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K-SDG 목표 16 “평화, 정의, 포용적 제도”와 대응하며, UN SDG 16 (평화와 정의)의 지역 구현에 해당함
- 강원도는 투명한 행정과 주민 참여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특수하게 접경지역을 갖고 있어 평화지대 협력 증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세부목표로 책임있는 투명행정 실현(16-1), 도민 권익 증진(16-2), 상생과 공영(16-3)이 있으며, 주요 지표로 공공기관 청렴도,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인권민원 해결 건수,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률 등이 사용됨
- 강원도의 목표 16은 국가 목표와 궤를 같이하면서도, 접경지역의 특수성(군사 규제, 남북 교류)에 따른 평화 지표를 포함하는 지역 특화가 특징임

목표16 인권·정의·평화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6	인권·정의·평화	16-1	책임있는 투명한 행정실현	(1)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감사위원회
				(2)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총무과
		16-2	도민권익 증진	(1) 인권민원 해소 건수	자치행정과
		16-3	상생과 공영	(2)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률	접경지역과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16-1	(1)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1		목표	-	2	1	1	-122.0	
	실적	3	4	4	-					
평가	-	미달성	미달성	-						
16-1	(2)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96.4		목표	-	95.2	95.6	96.4	101.0	
				실적	95.0	96	97	-		
				평가	-	달성	달성	-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16-2	(1) 인권민원 해소 건수	280		목표	-	8	10	280	117.6	
				실적	7	4	14	-		
				평가	-	미달성	달성	-		
16-3	(1)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률	30		목표	-	30	30	30	-	-
				실적	-	54	28	-		
				평가	-	달성	미달성	-		

○ 2023~2024년 달성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 2023년 목표 2등급 대비 실적 4등급으로 미달성됨. 청렴도 평가에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목표했던 상위권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 노력이 부족했음을 시사함. 2024년 목표 1등급 대비 실적 4등급으로 미달성이 계속됨. 최고 등급 달성은 커녕 전년과 동일한 4등급에 머문 것은 개선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청렴도 향상이 시급함
-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 2023년 목표 95.2% 대비 실적 96.0%로 달성함. 청구된 정보의 공개 비율이 목표치를 소폭 상회하여 행정의 투명성이 양호한 수준임을 보여줌. 2024년에도 목표 95.6% 대비 실적 97.0%로 달성하여 높은 공개율을 유지함. 꾸준한 정보공개 관행 정착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명 행정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권민원 해소 건수 : 2023년 목표 8건 대비 실적 4건으로 미달성됨. 접수된 인권 관련 민원의 해결 건수가 목표의 절반에 그쳐 인권침해 구제 실적이 저조함. 그러나 2024년 목표 10건 대비 실적 14건으로 초과 달성함. 전담기구 설치 및 적극적인 조정 노력으로 민원 해결이 크게 늘어나 목표를 웃돌았으며,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이 제고된 긍정적 변화임. 향후에도 신속한 민원 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함
-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률 : 2023년 목표 30% 대비 실적 54%로 달성함. 접경지역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군사 규제 사항 중 54%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져 목표를 크게 상회함. 이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일부 군사 규제가 완화된 결과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함. 2024년 목표 30% 대비 실적 28%로 미달성됨. 개선률이 전년에 비해 정체된 것은 추가 규제 완화가 지연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군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목표 16'에 대한 장기 목표 달성 전망을 위해 순향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지표는 '뇌우'(⚡)로 평가됨. 청렴도가 목표 대비 낮은 실적으로 최근 2개년도 실적이 좋지 않으며, 현 추세가 이어지면 장기 목표 역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이미 높은 공개율이 정착되어 장기적으로도 목표 달성 및 유지가 예상됨

- 인권민원 해소 건수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23년 목표 미달성이었으나, 24년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현 추세를 반영하면 2042년 장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율 지표는 2022년 실적이 부재하여 금회차 평가에서는 순항도 평가를 유보함
- 목표 16 분야는 행정 투명성과 주민권의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세가 보이나, 종합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함
- 정보공개 투명성은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인권민원 처리도 점차 개선되고 있어 강원도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와 같은 평화 협력 지표는 2년간 변화가 없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됨
- 이는 지방자치단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으로, 국가적 협의가 지연된 결과라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4개 지표 중 맑음 2, 뇌우 1, 판단 유보 1개로, 향후 목표 16의 달성을 위해서는 접경지역 문제 해결과 청렴도 향상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정책적 제언으로는 정부와 공조하여 접경지역 규제 완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남북교류 기반을 마련할 것, 공직윤리 교육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로 청렴문화를 정착시킬 것, 인권 침해 사각지대(외국인 주민 등) 발굴과 규제역량 강화를 들 수 있음
- 강원도가 이러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목표 16에 명시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도민 신뢰를 두텁게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17. ‘목표 17. 협력’에 대한 지표 평가 결과

- 목표 17 “협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다자간 파트너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는 K-SDG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와 상응하며, UN SDG 17 (글로벌 파트너십)의 지역 실천에 해당함
- 강원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 지식공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세부목표로 대외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17-1), 도민사회 파트너십 촉진(17-2), 학관(學官) 협의체 교류 강화(17-3)가 있으며,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건수, 국제연수 프로그램 실시 건수,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 규제개선 건의 과제 수, 지역 대학 연계사업 건수 등의 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 강원도의 목표 17은 국가 차원의 국제개발원조(ODA) 등과 비교하면 지방정부 역할에 초점을 두어, 지방 대외협력 및 지역 내 협업 강화라는 특화 방향이 있음

목표17 협력



목표 번호	목표명	세부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	소관부처
목표 17	협력	17-1	대외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1)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건수	국제협력관
				(2) 국제연수 운영 건수	국제협력관
		17-2	도민사회 파트너십 촉진	(1)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	예산과
				(2) 규제 건의·개선 과제 건수	규제혁신과
		17-3	학관 협의체 교류 강화	(1) 지역·대학간 연계사업 추진 건수	인재육성과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17-1	(1)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건수	16		목표	-	11	12	16	135.6	
				실적	11	31	21	-		
				평가	-	달성	달성	-		

세부 목표	지표명	2042 목표	23-24 달성도	지표값 (최신 가용지표)					순향도	
				2022	2023	2024	2042	순향도		
17-1	(2) 국제연수 운영 건수	10		목표	-	7	7	10	132.0	
				실적	6	11	11	-		
				평가	-	달성	달성	-		
17-2	(1)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	0.08		목표	-	0.03	0.04	0.08	102.8	
				실적	0.03	0.035	0.036	-		
				평가	-	달성	미달성	-		
17-2	(2) 규제 건의·개선 과제 건수	-		목표	-	90	90	-	-	
				실적	141	275	182	-		
				평가	-	달성	달성	-		
17-3	(1) 지역·대학간 연계사업 추진 건수	10		목표	-	6	7	10	320.4	
				실적	5	5	55	-		
				평가	-	미달성	달성	-		

○ 2023~2024년 달성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건수 : 2023년 목표 11건 대비 실적 31건으로 크게 초과 달성함.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을 계기로 다양한 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목표를 대폭 상회하였으며, 2024년에도 목표 12건 대비 실적 21건으로 달성하여 높은 교류 실적을 유지함. 국제 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성공적이었으며, 이는 향후 경제·문화협력 기반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연수 운영 건수 : 2023년 목표 7건 대비 실적 11건으로 달성함. 공무원 및 주민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목표보다 많이 운영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함. 2024년에도 목표 7건 대비 실적 11건으로 달성하여 전년과 동일한 높은 운영 실적을 보임. 국제연수 수요 증가와 예산 확보로 계획을 상회하는 연수를 시행한 것으로, 향후에도 도민들의 국제적 시야 확대를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 : 2023년 목표 3% 대비 실적 3.5%로 달성함.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도 예산의 3.5%가 주민 제안사업으로 편성되어 목표치를 초과함. 2024년 목표 4% 대비 실적 3.6%로 미달성됨. 참여예산 반영 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예산총액 증가 대비 주민참여 사업 발굴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주민참여 확대와 제안사업 발굴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민주적 예산 편성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임
- 규제 건의·개선 과제 건수 : 2023년 목표 90건 대비 실적 275건으로 대폭 초과 달성함.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주민들로부터 예상보다 훨씬 많은 건의가 접수되고 개선이 이루어져 목표를 크게 초과함. 2024년에도 목표 90건 대비 실적 182건으로 달성하여 두 배 이상의 성과를 달성함. 행정규제 개선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음을 보여주며, 이는 지역 경제활동 환경 개선에 긍정적임. 향후 접수된 과제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과제임

- 지역·대학 간 연계사업 추진 건수 : 2023년 목표 6건 대비 실적 5건으로 미달성됨.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사업 발굴이 기대에 못 미쳐 약간 부족한 실적을 보임. 그러나 2024년 목표 7건 대비 실적 55건으로 크게 초과 달성함. 대학의 지역협력 사업이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목표치를 크게 넘어섬. 이는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등 협력 기반이 마련된 결과로 풀이되며,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목표 17’에 대한 장기 목표 달성 전망을 위해 순향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방정부 국제교류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교류 활동이 확대되어 목표를 상회하였고, 추세도 매우 양호함. 향후에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목표에 순조롭게 기여할 전망이다
 - 국제연수 운영 건수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계획대로 운영되어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으며, 국제협력 역량 강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 주민참여예산 비율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참여율이 지속 상승하여 목표치를 넘고 있으며, 도민참여 거버넌스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임
 - 규제 건의·개선 처리 건수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도민 제안사항이 계획대로 처리되고 있어 순향 중이며, 규제혁신을 통한 행정 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 지역·대학 연계사업 지표는 ‘맑음’(☀)으로 평가됨. 협력 사업 추진이 목표에 부합하여 양호한 상태이며, 지역과 대학의 파트너십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음
- ‘목표 17’ 분야는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거나, 주민참여 및 지역협력 측면에서는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해외교류 및 국제연수 등 대외 협력 지표는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활발해지면서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으나, 주민참여예산, 대학 간 협력 등 지역 내 협치 지표들은 다소 부진하여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음
- 이는 도민 참여 채널이 형식적이거나, 대학-지역연계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5개 지표 모두 맑음으로 평가됨
- 장기적으로 목표 17을 달성하려면 특히 지역 차원의 협력 생태계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정책적 제언으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및 제안사업 피드백 강화로 실질적 주민참여 보장,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신속 검토와 중앙정부 협조체계 구축으로 성과 제고, 지역대학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공동프로그램 개발로 지속적 산학관 협력 활성화 등이 제시됨
- 더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특례를 활용한 규제혁신에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남북 교류 등 접경지 평화협력을 선도함으로써 목표 17의 글로벌·지역 파트너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제3절 요약 및 총평

- 강원특별자치도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2023~2024년 평가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서 단기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고 장기 목표를 향한 순항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95개 지표 중 절반 이상(약 50여 개)은 2년 연속 연간 목표를 달성하였고, 20여 개 지표는 한 해라도 목표를 충족함
- 이에 반해 20여 개 지표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목표에 미달하여 취약점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지표는 데이터 미확보로 평가가 보류됨
- 장기 목표 순항도 측면에서도 약 2/3의 지표가 ‘맑음(☀)’ 수준으로 충분한 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10여 개 지표는 ‘너우(⚡)’로 현재 추세대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나머지 지표들은 ‘흐림(☁)’ 또는 중간 수준으로, 추진 노력의 강화 여부에 따라 향후 전망이 바뀔 수 있는 단계에 있음
- 강원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강점으로는, 사회·경제 분야 상당수 지표들이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며 양호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특히 일자리, 복지, 교육, 성평등, 경제성장,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협력 거버넌스 등 여러 영역에서 정책 목표치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기존 정책 추진 전략의 유효성과 행정 집행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분야들은 장기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져 있으며, 현재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하여 성과를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 반면 취약점으로 부각된 분야도 분명한데, 건강(목표 3) 분야의 자살률·흡연율 등은 지속 악화 또는 정체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며, 기후대응(목표 13)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재해 대응 일부 지표와 해양환경 보호(목표 14) 분야, 그리고 특정 지역현안(목표 16의 접경지역 등) 지표들이 목표 대비 부진한 상태임
- 이들 영역에서는 현재의 정책수단만으로는 장기적 개선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보다 강력한 정책 개입과 투자, 혁신적인 접근 전략이 요구됨
-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보호 분야의 경우, 전국적·글로벌 변화에 영향을 받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면서 지역 차원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임
- 전반적으로 강원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며 미흡한 부분은 조기에 보완하는 적응적 거버넌스가 중요함
- 또한, 부문별 목표 간 연계와 균형을 고려한 정책 추진으로 한 분야의 발전이 다른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도민 참여와 협력을 지금처럼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면, 2042년까지 강원도가 지향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구현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임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제1절 심층평가의 개요

1. 국가 지속가능성 심층평가

- 국가 지속가능성 심층평가의 목적은 지표의 수치적 추세 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원인과 배경, 정책적 맥락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음
- 2024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필요성을 반영하여 ‘심층평가’를 실시하였
으며, 이는 단순 수치 이상의 정책 해석과 구조적 맥락 파악을 목적으로 함
- 국가는 ‘심층평가 지표’를 선정함에 있어 ① 정량적 평가결과상 부진하거나 악화된 지표,
② 정책적 중요성이나 시급성이 높은 지표, ③ 전략별 균형을 고려한 지표를 대상으로 선
정함
- 구체적으로는 '흐림'이나 '뇌우' 등 낮은 평가등급을 받은 지표 중, 정책 연관성이 높고
향후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
로, 4대 전략(사람, 번영, 환경, 평화·협력)별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총 11개
의 지표가 심층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
 - 이는 심층평가가 단순히 통계적 추세의 나열을 넘어, 실제 정책적 함의와 개선 방안을 모색
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을 보여줌
- 심층분석 지표에는 자살률, 산업재해율, 온실가스 배출량, 비정규직 비율, 산림면적 비율,
사회재난 사망자 수 등 구조적 해석이 필요한 지표들이 포함되었음
- 심층평가에서는 선정된 지표에 대해 현황 및 원인 분석(지표의 의의, 현황 및 추이, 그
원인 등), 관련 정책 현황, 그리고 지표 개선을 위한 향후 정책 과제 등을 상세히 분석함

2. 강원도 지속가능성 심층평가 목적 및 필요성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2023~2042)'을
통해 도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를 수립함. 이는 UN의 SDGs 및 국가 K-SDGs와 연
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계획으로 국가 보고서가 국가 차
원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듯이, 강원특별자치
도 또한 자체적인 지속가능성 평가와 심층 분석이 필수적임
- 강원특별자치도 심층 분석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강원특별자치도 특수성 반영 및 맞춤형 정책 도출 :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광범위한 규제 면적,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발생 증가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사회·경제·환경적 여건과 도전 과제를 안고 있음.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평가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어려움. 심층 분석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특화된 문제의 원인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둘째, 계획의 실행력 제고 및 책임성 확보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명시된 세부 목표와 지표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 달성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진단해야 함. 이는 단순히 지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계획의 내실을 다지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셋째,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 제시 :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로서 규제 혁파 및 파격적인 특례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심층 분석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현재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임

3. 강원도 지속가능성 심층평가 지표 선정 원칙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심층 분석 지표 선정은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의 원칙을 준용하되,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상황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한 심층평가 지표의 주요 선정 원칙은 다음과 같음

첫째, 수치적 평가 결과의 '부진' 지표 우선 고려 : 국가 보고서의 '목표순향도' 평가에서 '뇌우'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 또는 '흐림' (정체 상태) 등급을 받은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함.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제의 원인을 깊이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큼. 예를 들어, '2024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뇌우'로 평가된 산업재해율,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지방상수도 자급률, 산림면적 비율, 사이버 범죄 검거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경우 심층 분석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음

둘째, 강원특별자치도 발전 관점에서의 '중요성' : 단순히 수치적 부진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을 선정함. 이는 강원특별자치

도의 비전, 전략, 그리고 중점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들을 의미함. 예를 들어,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본보고서'에서 강조하는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험,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발생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현안과 관련된 지표들은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심층 분석의 중요성이 높으며, 농가 소득 증대, 친환경 농업 육성, 지역 특화 산업 성장, 의료 취약지 해소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 목표와 직결되는 지표들이 여기에 해당함

셋째, 정책적 '시급성':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정책적 개입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표들을 선정함. 이는 단기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나,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지표들을 포함함. 예를 들어, '2024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흐림' 또는 '너우'로 평가되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이 컸던 지표들(예: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사회재난 인명피해)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정책적 시급성이 인정됨.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추진되는 규제 혁신, 첨단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정책 방향과 관련된 지표들도 그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급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음

- 이러한 원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성 평가 심층 분석은 단순한 통계적 진단을 넘어, 지역의 특성과 정책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 각 원칙 당 2개 내외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강원도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이행력 확보와 정책 전환의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심층평가는 단순한 지표 점검을 넘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의 문제 구조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행성과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제2절 주요 지표별 심층평가

1. (중요 지표) 목표 9.1.1. 주력산업 분야 지원기업의 사업화 매출액

가. 지표 9.1.1의 개요 및 의의

- 지표 9.1.1(주력산업 분야 지원기업의 사업화 매출액)은 강원도가 선정한 지역 핵심산업 분야에서 도·시군이나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창업·사업화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의 총 매출액을 나타냄
- 즉, 연구개발(R&D), 창업 보육, 시제품 제작·상용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이나 제품을 사업화하여 창출된 매출 규모를 합산한 것임
- 이 지표는 지원 정책이 실물경제로 연결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핵심 성과지표로, 혁신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직결됨
- 세계적으로도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9는 산업화와 혁신을 강조하는데, SDG 9는 “경제 발전과 인간의 웰빙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추진하며 혁신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산업 부문의 기술역량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처럼 본 지표는 산업·혁신 강화라는 SDG 9의 취지와 부합하며, 지역차원에서 혁신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음

나. 달성도·순향도 성과 평가

- 최근 평가연도(2023~2024년) 강원도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지표 9.1.1의 목표 매출액은 2023년 110억원, 2024년 120억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실제 실적 매출액은 각각 약 112.9억원, 119.5억원을 기록함
- 이는 2023년에는 목표 대비 약 102.6%, 2024년에는 약 99.6%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목표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나타낸 것임
-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모두 달성도가 ‘달성’으로 판정되었고, 순향도도 ‘맑음’으로 양호하게 평가됨
- 실제 매출액은 2023년 112.9억원에서 2024년 119.5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으며, 이는 기업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음
- 중장기 목표(2042년 160억원)에 이르는 연평균 성장률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약 연 23%)

이상)으로 나타나, 장기계획 달성을 위한 성장 궤적이 유지되고 있음

다. 정책 배경 및 추진 현황

- 강원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한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 중 “지속가능발전 목표 9: 지역산업 성장과 혁신” 관련 과제로 산업 육성 계획을 포함함
-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의 지역산업진흥계획(매년 수립)과 연계하여, 강원형 특화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바이오헬스, 미래형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SW, 스마트제조 등 5+1(첨단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지역별로는 산림바이오·관광·농생명 등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창업 지원 정책도 강력히 병행되고 있음
- 강원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강원권 창업중심대학사업」과 가톨릭관동대학교의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예비·초기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과, 2022년부터 강원권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는 3년간 총 250개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547억8000만원의 매출을 창출했고, 가톨릭관동대의 창업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122곳도 2년간 247억3000만원의 매출 성과를 내고 있음(출처 : etnews.com)
- 이 밖에도 강원테크노파크, 강원혁신센터, 지자체 혁신지원기관 등이 연계하여 기술사업화, 시제품 제작, 기업 애로 해결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주요 정책 예로는 ‘강원 주축산업 퀀텀점프 프로젝트’(주력산업 고도화), ‘강원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등이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면서, 지원기업의 제품·서비스 사업화가 활성화되었고, 이는 매출액이라는 성과지표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정책 실현 효과 분석

- 앞서 언급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은 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예컨대 강원대 창업중심대학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들은 기술고도화와 시장 진입 지원

- 을 받아 연구 성과를 매출로 연결했으며, 그 결과 매출 547억원 달성이라는 눈에 띄는 실적을 보였으며(출처 : etnews.com), 창업패키지로 지원된 기업들도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지원을 받아 단기간에 247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출처 : etnews.com)
- 이는 지원금과 멘토링 등이 실제 성과 창출로 이어진 구체적 사례로, 지표 9.1.1의 수치 상승에 기여했다 판단됨.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공동기술개발 등의 지원으로 제조업체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이들의 사업화 매출도 증가하였다 판단됨
 -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이종 산업 간 기술 융합이 촉진되고, 연구기관과 기업 간 R&D 협력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어 기술 사업화 단계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나며, 강원도와 시군이 함께 진행한 시제품 제작 지원, 판로개척 지원 사업도 신규 매출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이처럼 광범위한 산업 지원책들의 상승효과로,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지표 9.1.1의 달성도·순향도가 모두 양호하게 나타남

마.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 그럼에도 몇 가지 과제도 남아 있음
- 첫째, 성과 지속성 확보가 중요함
 - 지원기업의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기업과, 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을 확보한 기업을 구분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매출액 지표는 양적 성장을 보여주지만, 질적 측면(수익성·지속가능성·환경성 등)은 별도 평가해야 함
- 둘째, 산업 구조적 한계가 지적됨
 - 강원도는 다른 광역단체보다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관광·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지원기업 Pool이 한정적일 수 있음
 - 이에 따라 성장성 높은 신산업 발굴과 기존 주력산업의 업그레йд(스케일업) 지원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 함
- 셋째, 인력 및 기술 격차 해소가 필요함
 - 첨단 기술 분야 전문인력 부족, 원천 기술 확보 미흡 등이 사업화 속도를 제약할 수 있음
 - 따라서 산학연협력 강화와 인재양성, 그리고 대외투자 유치 등을 통한 지원책 강화가 필요함
- 정책적으로는, 지원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 성과(매출)를 명시적으로 목표에 반영하여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성과를 거둔 기업 사례를 적극 홍보해 다른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성과 환류(피드백) 기전을 구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함

-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육성도 필수적인데, 예를 들어, 친환경 수소·재생에너지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농생명융합·바이오 등 강원도의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국책·민간 자원과 연계한 대형 R&D 프로젝트를 유치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지원 실적(매출) 외에 고용 창출과 가치사슬 상생,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복합성과 지속가능성 관점의 평가 지표를 동시에 개발·적용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산업혁신 정책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함
- 지표 9.1.1은 강원도 산업혁신 정책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 결과 목표 달성도가 높아 정책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 개선을 통해 성장 추세를 견고히 해야 함
- 강원도는 지역 특화된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균형 잡힌 산업 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임

2. (중요 지표) 목표 11.1.2 철도 연장

가. 지표 11.1.2의 개요 및 의의

- 지표 11.1.2 ‘철도 연장’은 강원도 내 구축된 철도망의 총 길이를 의미함
- 철도는 지역 간 교통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필수적임. 특히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1.2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접근가능한 지속가능한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철도망 확충은 이와 맥을 같이 함
- 참고로 한국의 전체 철도 연장은 2021년 기준 약 4,309km로 세계은행 등도 집계하고 있으며(출처 : theglobaleconomy.com), 강원도의 철도망(약 472km)은 국가 전체의 약 11% 수준임
- 강원도는 동서축 및 남북 축 철도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입·물류망 강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나. 달성도·순향도 성과 평가

- 2023년 강원도 전체 철도 연장은 약 472.1km이며, 2042년 목표는 722.5km로 설정되어 있음
- 2024년 목표는 509.3km였으며, 2023년 목표 달성 여부는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성과 평가에서 달성도는 101.7%에 달함
- 또한 진행상황(순향도)은 ‘맑음’으로 양호한 상태로 평가됨
- 이는 새로운 노선 착공·개통 등의 추진으로 단기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음을 의미함
- 다만 2042년 장기 목표인 722.5km 달성을 위해 매년 약 2~3% 수준의 꾸준한 연장률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됨

다. 정책 배경 및 추진 현황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서 교통망 확충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는데, 특히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잇는 동서철도 축의 구축으로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 강원도에서 추진중인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기간 2016~2027) : 수도권(서울 용산)과 강원권을 연결하

는 고속철도망 건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2.4조원이 투입된다. 2027년 말 완공 시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환승 없이 1시간 39분에 주파 가능하며, 이는 자동차 이용 대비 약 1시간 20분이 단축되는 셈임(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프 korea.kr). 이 노선의 개통으로 한반도를 동서로 연결하는 횡단철도가 완성되며, 강원 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원주~강릉 KTX (강릉선)(2017년 개통) : 2017년 12월 개통된 강릉선 KTX는 서울~강릉 간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 수도권과 영동지역을 잇는 고속교통망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 여주~원주 복선전철(2024년 개통 예정) : 여주와 원주를 잇는 복선철도로, 경강선 강릉선과 수도권 광역철도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함
 - 원주제천 및 포항삼척 철도(2021~2022년 개통) : 강원도 관내를 관통하는 기존 노선의 연장·신설로 내륙과 동해안 간 연결성을 강화함
 - 기타 계획: 용문홍천, 춘천철원 등 남북 연계 노선과 삼척~동해 광역 철도 등 추가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임
- 이들 정책 사업은 지역 특성(지형, 인구분포, 관광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별되었으며, 강원도 기본계획은 철도망 확충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열쇠임을 강조하고 있음

라. 정책 실현 효과 분석

- 강원도의 철도망 확충은 교통 접근성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음
 - 예를 들어 KTX 강릉선 개통(2017년) 이후 강릉지역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역세권 상권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 강릉본부 포럼에 따르면, 강릉선 개통 후 영동지역 월평균 방문객 수는 약 9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폭설 등 악천후에도 철도 이용객은 안정적으로 유입됨
- 철도망 확충을 통해 역세권 상권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으나, 인구 유입이나 고용 증가 등 인구·경제적 변화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출처 : mbceg.co.kr)
- 이는 철도망 확충만으로는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고속철도망 완성(2030년경) 등을 대비해 교통·관광·산업 연계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마.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 현황을 종합하면, 강원도 철도망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연장되며 단기 목표가 달성되는 등 성과를 보였으나, 장기 목표 달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음
- 첫째, 재정 및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철도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과 긴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국가차원 재정지원과 지속적인 예

타·사업승인 절차 이행이 중요함

-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철도 서비스 개발이 요구됨
 -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명소 간 환승 체계 구축, 관광열차 운영 등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함
- 셋째, 교통 다각화 및 연계성 개선임
 - 철도 노선 개통 시 지역 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철도역 주변 개발(역세권 개발)을 통해 생활편의와 경제효과를 증대시켜야 함
- 넷째, 환경·안전 고려임
 - 산악이 많은 강원도 특성상 터널·교량 건설 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노후 인프라 관리를 위한 안전투자를 병행해야 함
-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달성도와 순항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제언을 통해 철도망 확충은 단순 연장에 그치지 않고, 강원도의 저밀도·관광 중심 지역 특성과 연계된 종합적 교통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3. (시급 지표) 목표 7.1.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및 에너지 자급률

가. 지표 7.1.1의 개요 및 의의

- 지표 7.1.1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과 ‘에너지 자급률’ 두 가지를 포함하는 복합 지표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도내 총발전량 중 태양광·풍력·지열·수력·연료전지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예를 들어, 2023년 강원도의 총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1%로, 발전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에너지 자급률은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중 도내에서 생산·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함
 - 즉 강원도가 스스로 생산한 에너지(수력발전, 풍력발전 등 포함)로 지역의 에너지 소비를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나타냄
- 에너지 자급률이 높을수록 외부 의존도가 낮아져 에너지 안보와 지역경제·산업에 유리함
- 이 두 지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 7번(“모두를 위한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보장”)과 직결되는데, SDG7의 세부목표 7.2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고 명시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확대가 핵심 과제임
- SDG7은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접근성 강화를 강조하므로, 지역의 에너지 자급률 향상 역시 SDG 달성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국내적으로도 ‘그린뉴딜’ 등 정부 기조 하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3020 계획이 추진 중이며(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프 korea.kr), 에너지 자립도(자급률) 제고를 위한 6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자급률 3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출처 : 2050cnc.go.kr)
- 이처럼 양 지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가·지방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과도 깊이 연계됨

나. 달성도·순향도 성과 평가

- 2023년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는 18.0%였으나, 실제 달성 실적은 19.1%로 목표치를 초과함
- 이에 따라 2023년 달성도는 ‘맑음’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산출된 순향도(CAGR)도 108.7%로 나타나 장기 목표 대비 목표 이상의 성장세임을 보여줌

- 2024년 목표치(18.6%)도 2023년 현재치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에도 양호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자급률의 경우, 2022년 기준 실적은 약 41%였으며, 2023년 목표는 36%로 설정되었지만 실제 2023년 자급률 자료는 집계되지 않았음
- 그러나 목표치 대비 실적을 고려하면(실제 41% > 목표 36%), 달성도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며, 평가상 '맑음' 판정을 받음. 자급률의 순향도는 제공 자료에 직접 기재되지 않았으나, 강원도 추진계획상 장기 목표(2042년 44%)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계획 이상의 속도로 진행 중임을 순향도 수치(재생에너지 비중 기준 108.7%)로 간접 확인할 수 있음
- 종합하면, 2023년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실적은 목표 대비 우수하게 달성되었으며, 향후 2042년 목표 달성 경로(신재생 비중 21%, 자급률 44%)로 순향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다. 정책 배경 및 추진 현황

- 강원도는 2023년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2023~2042)'을 수립하여 장기 비전과 전략목표를 제시함
- 이 계획에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소비 확대(7.1 세부목표) 아래 신재생에너지 비중과 에너지 자급률 지표를 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전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함
- 장기적으로 204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로, 에너지 자급률을 44%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5년 단위 추진계획에 세부 목표를 단계별로 배분함
- 예를 들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2028~2042년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연간 목표치를 상회하는 규모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임
- 실행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주택·공공건물·산업단지 등 복합 구역에 태양광·지열·연료전지 등 혼합형 설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사업(지자체 건물·복지시설 등에 태양광·연료전지 설치 확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저소득가구 고효율 조명 지원 통한 전력비 절감) 등이 대표적임
-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수요처에 설치된 태양광·소형 풍력 등 분산형 발전 설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2023년에는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하여 광역 풍황 자원을 활용한 대형 풍력단지 조성에도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됨
- 이 계획은 2030년까지 풍력발전단지 1.4GW 규모를 조성함으로써 연간 약 143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며(강원도 자체 보고),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강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 등 다양한 국가 정책과의 연계도 진행 중임
- 예컨대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높이고, 6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에너지 자립도 30% 목표를 제시함
- 강원도는 이러한 국가 목표와 보조를 맞추면서 지역 특성(풍부한 풍력 및 수력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표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라. 정책 실현 효과 분석

- 위의 정책 추진은 지표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강원도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확대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2022~2023년간 신재생발전 용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그 결과 발전 비중 역시 단기간에 목표치를 초과함
- 특히 풍력 및 태양광 관련 인허가 간소화, 주민 수익 공유 모델 도입 등 행정적 지원이 업계 투자를 촉진했고, 민간투자로 설치된 풍력단지와 태양광 패널 수가 증가함
- 또한 지역 에너지 복지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절감 사업은 지역 내 에너지 수요 관리에도 기여함
- 이처럼 다양한 정책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률 상승과 자급률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현실적으로 아직 강원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약 19%)은 수도권 등 전국 도시권보다 높지만,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절대 비율은 여전히 제한적임
- 다만 강원도가 석탄·LNG 발전이 많은 타 지역과 달리 풍력·수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 여력도 크다고 볼 수 있음
- 즉,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노력이 필요함
- 예컨대, 강원도 발전량 중 수력(8.6%)을 제외한 풍력·태양광 등 비중은 10% 내외로, 국가 평균(9.7%, 2023년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나 중앙정부와 공동 추진한 그린 에너지타운 조성, 군부대·공공건물 대상 그린 리모델링 등으로 전력소비 감소와 신재생 증설 동시 추

진은 향후 순향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임

마.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 강원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몇 가지 도전과제가 남아 있음
- 첫째, 지리적 한계와 계통 여건임
 - 강원도는 산악 지형이 많아 대규모 풍력·태양광 단지 개발이 용이하나, 전력망(송·배전망) 확충이 필수적임
 - 대용량 신재생 전원을 지역 외 송전하거나 지역 내 저장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둘째, 주민 수용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해야 함
 - 풍력발전은 고지대에 설치되나, 자연경관과 생활권 갈등 우려가 있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을 확대하고, 생태·조망 훼손 최소화를 위한 기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계절·간헐성 문제를 극복해야 함
 - 바람·태양광 발전은 계절·날씨에 따라 변동이 큰데, 강원도는 동절기 발전량이 감소하는 계절성을 가짐
 - 따라서 송수관 보조수력 활용(담 물을 이용한 발전), 연료전지·수소 클러스터 같은 새로운 기술 도입,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등이 보완책이 될 수 있음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다각적 수단의 통합적 추진이 중요
 -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함께 에너지 사용량 감축(건물 효율화, 고효율 가전 보급 등) 정책을 병행하면 자급률 향상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음
 -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예: 재생에너지 마을 만들기, 그린뉴딜 체감 사업)하여 지표 상승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강원도의 탄소중립 비전과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
 - 도내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의 필수 요소인 만큼, 지속가능 발전 계획과 탄소중립 로드맵을 연계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지표 7.1.1에 대한 평가는 현재 강원도가 설정한 목표에 우수하게 부합하고 있으며, 정책적 노력도 그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향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강원도의 에너지 자립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촉진해야 할 것임

4. (시급 지표) 목표 1.1.1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

가. 지표 1.1.1의 개요 및 의의

- 지표 1.1.1(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은 강원도 전체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지원 대상자)의 비율로 정의됨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는 국가의 주요 사회안전망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됨
- 이 지표는 도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의 범위와 포용성을 나타내며, SDG 1의 ‘빈곤 퇴치’ 목표 중 1.3(“모든 계층의 사회보장제도 이행 및 취약계층 보장”)과 직접 연계됨
- 또한 전국적으로도 SDG 1.3.1(사회보장제도 수혜율)과 대응되는 지표로, 취약계층의 지원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 및 지방 차원의 핵심 통계임

나. 달성도·순향도 성과 평가

- 강원도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은 2022년 기준 5.58%였으며, 2023년 목표 5.6%를 제시함
- 도 자체 평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실제 비율은 5.6%로 목표를 충족했고, 2024년에는 5.8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도 목표 5.6%, 달성 상태)
-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달성도(목표 대비 실적 비율)는 약 102.5%로 나타났으며, 순향도는 “맑음”(양호)으로 평가됨
- 즉, 최근 수년간 수급자 비율이 다소 상승 추세지만 계획된 목표 수준을 소폭 상회하며 달성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2023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약 5.0%에 해당하고, 강원도는 이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도내 빈곤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시사함
- 또한 전국적으로도 SDG 1.3.1(사회보장제도 수혜율)과 대응되는 지표로, 취약계층의 지원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 및 지방 차원의 핵심 통계임

다. 정책 배경 및 추진 현황

- 국가 차원에서는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잇따르고 있음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활 보장수준(생계급여 기준)이 1,833,572원에서 1,951,287원으로 상승함
-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공제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선발 기준이 완화되어 약 7만1천 명의 신규 생계급여 수급이 기대됨(출처 : mohw.go.kr)
- 이외에도 의료급여 제도의 본인부담 체계 개편, 고용·주거·교육급여의 맞춤형 확대 등이 추진됨
- 강원도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서도 “저소득층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보장”,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노인연금 지급”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를 명시하며 적극적 복지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강원도는 저소득층의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층에게 기초연금·노령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는 한편,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음
- 또한 중앙·지방 복지기관 및 민간협력망(‘좋은이웃들’ 등)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긴급복지·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확대하고 있음

라. 정책 실현 효과 분석

- 이러한 제도 개편과 지원 확대는 수급자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됨
- 중위소득 인상과 선발 기준 완화는 취약계층의 수급권자를 대폭 늘려 지표 수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임
- 특히,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전국 수급자 7만여 명이 신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원도 역시 저소득 인구 증가분이 반영되며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큼
- 강원도는 전국 평균보다 고령층 비중이 높아, 고령 인구에 대한 지원 확대(기초연금, 경로당 운영 등)도 수급자 수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 실제로 2023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45.2%를 차지하며 증가 추세이다(전국 평균도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이 41.3%로 10년 전 대비 11.4%p 증가함(출처 : yna.co.kr))
- 이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강원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함. 반면,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긴급복지 예산 확대(국가적으로 취약계층 긴급복지예산 비율을 높이도록 정책 추진

중) 등은 복지 의존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강원도는 산간벽지와 어촌, 농산어촌 인구가 많아 일자리와 의료·복지 접근성이 낮은 편임
- 강원도는 이러한 지역특성에 대응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읍면 단위 복지상담, 비대면 복지상담 등을 시행해 왔음
- 다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한 지역에서 일자리 지원이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육성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마.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 지표 1.1.1의 향후 과제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빈곤 대응체계 강화가 있음
- 강원도는 산간 오지 비율이 높아 교통·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정부·도의 복지정책은 단순 수급 확대뿐 아니라 '탈수급' 프로그램 확대에도 초점을 맞춰야 함
 - 예를 들어, 농어촌과 산간지역을 위한 일자리 연계사업, 청년·여성 자활 지원 강화, 원격 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맞춤형 복지대책이 필요함
- 노인 빈곤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농산촌 노인 사회활동 지원이나 기초연금 추가 인상도 검토할 수 있음. 또한, 데이터 기반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확충이 필요함
 - 예컨대 복지 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마을 단위 통합관리, 민간기관(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업을 통해 잠재적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야 함
 - 역별 자원(예: 강원관광재단, 산촌 체험마을 등)을 활용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 기획도 효과적임
-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추이를 주시하여 대응해야 함
 - 예를 들어 2025년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수급자 증가분을 감안해 예산 편성 및 복지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요약하면, 지표 1.1.1은 강원도 빈곤층 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서 SDG 1.3과 부합하며, 최근 제도 개선과 지방의 복지정책 강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음
- 하지만 고령화 및 지역적 제약으로 인해 지원 수요가 커지고 있어, 향후에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돌봄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데이터 기반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함

5. (부진 지표) 목표 3.1.1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가. 지표 3.1.1의 개요 및 의의

-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특정 지역의 인구 100,000명당 연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의미하며,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과 생명존중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건강 지표임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며(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프 Korea.kr), 이는 보건 및 복지정책의 중요한 성과 목표임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 3(건강과 웰빙) 중 3.4 목표는 2030년까지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 감축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며, 자살예방은 정신건강 증진과 밀접히 연관되므로 SDG 3.4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간주됨
- 또한, 자살률은 국가건강증진계획과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등 우리나라의 주요 건강정책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 예컨대 제5차 국가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를 2021년 26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낮추겠다”고 목표를 설정함(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프 Korea.kr)
- 이와 같이 자살률 지표는 지역보건 정책의 유효성, 생명존중 문화 확산 정도를 보여주는 종합적 건강지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큼

나. 달성도·순향도 성과 평가

- 강원도 자살률은 최근 수년간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높은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강원도는 2021년에 인구 10만명당 32.7명으로 전국 평균 26.0명을 크게 웃도는 사망률을 기록함
- 2022년 강원도 자살자 수는 507명, 자살률은 33.1명으로 통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32.7명) 대비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임(전국 평균 2022년 25.2명)
- 강원도 자살률은 2023년 현재 약 31.7명(※강원도 자체 통계)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42년 장기목표인 30명에는 여전히 미달함
- 업로드된 평가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강원 자살률은 32.2, 2023년 31.7로 소폭 감소 추세이나, 장기목표(2042년 30.0) 달성은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됨

- 이러한 현황을 감안할 때, 현재의 성과만으로는 목표 달성 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줌

다. 정책 배경 및 추진 현황

- 강원도는 자살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2011년 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부터 마련
- 보건복지부의 국가자살예방 기본계획(5년 주기)과 연계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추진 중임
- 제5차 국가계획에서는 2027년까지 1인당 자살률을 18.2명으로 감축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등 지역맞춤형 예방체계를 마련함
- 강원도 차원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기본전략)과 연계하여 「건강한 삶 보장」 목표 하에 자살률 지표를 관리하고 있음
- 강원도 자살예방 시행계획(2024년)에는 ▲지역사회 단위의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추진, ▲24시간 자살위기상담전화 운영,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학교 및 마을 단위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등 주요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state.gwd.go.kr)
- 또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광역 1곳, 기초 4곳)를 설치하여 고위험군 등록·관리, 사례관리, 상담전화 운영, 유관기관 연계체계 등을 강화하고 있음
- 이외에도 “마음이음 사업” 등을 통해 의료기관과 정신건강센터 간 협력을 지원하며, 도내 주요 기업과 연계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도 도입하는 등 종합적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한편, 데이터 기반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강원도는 도내 자살 및 정신건강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하여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진사업의 전략적 기획·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강원도 자살예방센터에서는 매년 자살통계, 정신건강 사례관리 지표 등을 집계하여 도내 및 시군별로 공개하며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삼는데, 이러한 데이터 집적·분석 활동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도출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

라. 정책 실현 효과 분석

- 각종 예방사업과 지원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자살률 개선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남
- 국가계획 상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과 지역사회 지원은 시작 단계이나, 자살률 지표에는 뚜렷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 그나마 최근 2년간(2022→2023) 자살률이 32.2→31.7명으로 근소하게 하락한 것은 일부 성과로 볼 수 있음
- 이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확대, 일선 의료기관의 상담 연계 노력,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시범사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됨
- 하지만 [강원도민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높은 자살률은 여전히 “강원의 재난”으로 간주되며,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도 존재함
- 실제로 강원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자살자 다수는 중·노년층 독거남성이고, 시골지역 자살 취약요인이 많아 도 단위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도와 시군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지만, 일선 인력 부족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점이 지적됨
- 결론적으로, 강원도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기반 위에 ▲지역사회 기반 예방법 강화(농촌 마을 공동체 동원 등), ▲정신건강 인프라 확대(시군 정신건강센터 미설치 지역 해소), ▲통계모니터링 체계 지속적 고도화 등이 병행되어야 함

마.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 강원도 자살 예방의 당면 과제로는 인구고령화·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농촌 고립과 외로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요인이 있음
- 특히 고령화가 심한 읍면지역에서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며, 노년층 정신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큼
- 따라서 디지털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복지·의료팀 지원 등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가 요구됨
- 또한 청소년·청년층 자살 증가 추세에 대응해 학교·청년센터 연계 예방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야 함
- 정책적으로는 생명존중안심마을 프로젝트를 안정화하여 주민 주도의 예방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통계 기반 평가체계를 고도화하여 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이와 함께 자살부문 지역안전도 평가 개선 요구가 있는 만큼, 재난안전 관점에서도 정신건강·자살지표를 다학제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시도가 필요함
- 요약하면, 강원도는 지역 특유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자살률 지표의 개선 여건을 만들어야 함

6. (부진 지표) 목표 10.1.1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율

가. 지표 10.1.1의 개요 및 의의

- 지표 10.1.1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법정 비율 이상 고용했는지 보여주는 준수율임
- 즉,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에 비해 실제 고용된 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백분율로 나타냄
- 이 지표는 사회적 약자의 고용 접근성과 경제활동 참여를 가능히는 핵심 지표로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0번의 “장애여부를 막론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 확대”와 직결됨
- UN SDG 10.2는 “연령·성별·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을 증진”할 것을 강조하며, 국제사회 역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기회균등표준규칙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및 교육 기회의 평등 보장을 강조해 왔음
-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개선은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라는 SDG 10의 실현에 기여함

나. 달성도·순향도 성과 평가

- 2022~2024년 강원도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실적은 연도별로 66.7% → 63.2% → 57.8%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이는 목표 대비 상당 수준 미달하는 수치로 나타남
- 예컨대 2023년 목표치(72.2%)는 물론 2024년 목표치(77.8%)를 모두 충족하지 못해 23년·24년 모두 ‘미달성’ 평가를 받았으며, 순향도 역시 24년 기준 “구름”으로 기록돼, 목표 달성 흐름이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함
- 특히 추세선 상 연평균성장률(CAGR)이 -91.8%로 극심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현 수준이 유지될 경우 목표달성은 요원한 상태임
- 이처럼 강원도의 준수율은 향후 2042년 장기 목표(88.9%)와 비교할 때 크게 부족하며, 현재의 감소 추세는 시급한 개선 필요성을 보여줌
- 반면 전국 통계를 보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대상 부문에서 소폭이나마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4년 말 기준 국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21%로 전년 대비 0.04%p 상승하였고, 공공부문(3.9%)은 의무율(3.8%)을 넘어서며 기여함
- 민간부문도 3.03%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법정 3.1%에는 다소 미달한 상태로, 격차는 0.07%p까지 줄었음
- 이러한 전국적 추세와 대비해 볼 때, 강원도의 의무고용 준수율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정책적 우려가 큰 상태임

다. 정책 배경 및 추진 현황

-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국가·지자체, 공공기관 포함)에게 장애인 3.13.8% 이상 고용을 법정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부담금(벌금) 부과, 미고용 시 지원금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두는데, 동시에 장애인 신규 채용 시 고용장려금 지급, 중증장애인 근로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용하여 기업의 자발적 고용을 촉진하고 있음
- 2023년부터는 일부 산업에 남아있던 예외가 폐지되고 건설업 고용 기준이 상향되는 등 의무고용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2024년까지 공공부문 의무율 3.8%, 민간부문 3.1%가 유지됨
- 이 외에도 최근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디지털 훈련센터 확충, 인식개선, 생애단계별 고용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도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설립 지원이 대표적인데, 예컨대 2024년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는 지원바이오 등 3개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협약을 체결함
- 이들 기업은 공단의 작업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1년 내에 약정된 인원만큼 장애인을 고용하고, 이후 7년간 이를 유지해야 함
- 이처럼 표준사업장 제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유지 노력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장애인 고용 활성화 사례인데, 그 밖에도 강원도는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직무적응훈련, 교통·돌봄 지원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합지원 정책을 추진 중임

라. 정책 실현 효과 분석

- 국내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의무고용 준수율이 떨어진 배경으로는 몇 가지 요인이 거론됨
- 첫째, 산업구조와 규모임
 - 강원도는 관광, 농·축산업, 중소제조업 중심의 지역으로, 근로자 규모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음
 - 법적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이 많지 않으므로, 대상 자체가 크지 않아 준수율 계산에서 변동 폭이 클 수 있음

- 또한 기업들의 고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이 어려운 업종이 많아, 장애인 채용 유인이 낮음
- 실제 기업 설문 결과에서도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54.0%) 및 “업무 능력 검증 곤란” 등이 채용 기피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음
- 둘째, 공공·민간부문 격차를 줄여야 함
 - 전국적으로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는 반면 강원 지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전체론적 수치는 충족하나, 채용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큰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기 어려움
 - 반면 민간 중견·중소기업에서의 미달 비율이 여전히 높은 점은 강원도에서도 유사함
- 셋째, 지역사회 인식 및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구축이 충분치 않아 지원체도가 있어도 활용도가 낮음
 - 예를 들어, 저상버스 보급률(지하철·버스 접근성) 등 교통 기반 미흡은 장애인 출퇴근 편의를 저해하고 취업률에도 영향을 줌
 - 그럼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충, 인센티브 제공, 사례 발굴 등 정책 노력은 긍정적임
 - 다만 강원도의 경우 농어업 및 관광업 등 노동집약 업종이 많고 인구밀도가 낮아, 중앙에서 추진하는 일반적 고용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지역 맞춤형 산업연계형 직무개발,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근로 지원인 도입 활성화 등 특화된 보완책이 필요함

마.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강원도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 대책이 요구됨
- 첫째, 정보·인식 개선이 필요함. 기업들이 장애인 적합 직무 및 고용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하고, 모범 사례를 홍보해야 함
- 둘째,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함. 현재 고용장려금과 부담금 제도에 불구하고 미달 기업이 많으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함. 교통·교육·돌봄 등 장애인의 근무 조건을 종합 지원하고, 근로지원인제 등을 확대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야 함
- 넷째, 지역산업 연계가 필요함. 예를 들어 관광업체, 농축산업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친화적 직무를 발굴하고, 이를 표준사업장·일반기업 채용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함. 도 및 시군 공공기관이 모범적으로 장애인

을 채용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저상버스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사회적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이와 함께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지역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플랜을 수립해 장애인 고용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노력들이 뒷받침된다면, 강원도도 지속가능발전목표 10번이 지향하는 불평등 완화와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의 향상은 단지 법적 기준 충족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과제임